

#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인쇄/1997년 12월 27일

발행/1997년 12월 3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교류협력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4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

ISBN 89-87509-26-5

5,000원

연구보고서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 병 덕

민족통일연구원

#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체제의 강화와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추진 신념 및 통일대비 태세의 확립을 통일교육의 주요과제로 설정하였다.

## 1. 서론

광복이후부터 통일교육은 방공교육,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국방·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 등으로 변천·사용되어 왔다. 해방 이후 80년대 말기까지 30여년간 지속된 제1단계 통일교육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반공교육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체제간의 우열이 분명하게 나타난 1980년대 말부터 우리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으로부터 적극적인 통일 대비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모든 차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 및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사회문화형성이 요구된다. 통일 후 사회주의 체제하에 형성되어온 북한주민의 의식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남한 주민들과 크게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독일의 정치교육

### 가.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구조 및 주요내용

독일은 40여년에 걸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마침내 통일을 달성하였다. 독일통일의 내적 요인은 동독에 대한 서독체제의 절대 우위 확보이다. 특히 서독의 정치교육은 서독사회의 발전을 촉진시켜 내적 통일기반의 조성에 상당 정도 기여하였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독일통일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장벽은 통일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극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동독주민들의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여 독일정부는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일체감을 실현하고 동독지역 주민을 새로운 사회질서로 통합시키기 위해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지식 전달보다는 개인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의 가치 및 제도를 이해·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 정치교육은 시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비판력 및 판단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치 참여를 통한 사회의 민주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의 기본이념은 계몽, 참여, 민주화 등으로 축약될 수 있다.

독일의 정치적·제도적인 통일은 행정적·법적 절차를 통해 이미 완료되었으나, 동·서독지역 주민들 간에는 정신적·문화적 이질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 극복을 위해 서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동·서독의 통합 이해, 통합의 역사적 의의, 서독지역 주민

의 물질적 희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시민 교육으로서 독일의 정치·경제 체제를 이해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잔재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나. 시사점

서독은 통일 이전에 「사회적 법치국가」의 체제개혁을 통해 통일의 대내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주적 정치교육은 독일통일의 내적 요인으로 기능하였던 동독에 대한 서독체제의 절대우위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정책의 일환으로 남한체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우선 남한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통일후 증폭되고 있는 동서독 주민간 심리적 갈등과 아울러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동독지역 주민들의 정체성 위기를 고찰해 볼 때 통일 후 남북한에도 이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남북한 주민을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통일대비 정치교육은 분단 극복이라는 소극적 목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에서 민족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 등이 구현되어 민족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국가 건설의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며, 민주사회의 건설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3. 통일교육의 발전과정 및 실태

#### 가. 통일교육의 발전과정

그동안 시행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공교육 시기」, 「통일·안보교육 시기」를 거쳐 「통일교육 시기」로 변화되어 왔다. 해방 이후 80년대 말까지 30여년간 지속된 제1단계 통일교육은 민족적 측면이 강조되는 통일교육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반공교육에 치중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국제정세의 탈냉전적 경향으로 인해 기존의 반공교육은 통일·안보교육으로 전환되었다. 통일·안보교육은 통일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형성과 함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통일과 안보를 동시에 강조하였다.

1980년 말부터 남북한이 지속적인 대화와 함께 상호 불신감의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인식과 상호 접근이 필요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통일·안보교육의 무게 중심이 통일 교육에 치중하게 되어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나. 학교교육

##### (1) 초등학교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교육목표와 내용은 분단 인식 및 통일 필요성, 통일조국의 미래상, 평화통일의 방법 및 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1학년 통일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2학년의 경우에는 바른생활 교과 및 국어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내용은 일상적인 생활 경험과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 염원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4·5·6학년의 경우 도덕교과에서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의 비중은 커졌다. 이에 따라 국가생활과 통일·안보생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도덕교과는 국가·민족생활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되었다.

## (2) 중학교

중학교 통일교육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도덕교과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점차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하여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족공동체 번영에 기여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도덕교과 통일관련 내용은 분단 이후 계속되어 왔던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학교 도덕교과 통일교육은 종래처럼 통일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오늘날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들과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 (3) 고등학교

고등학교 윤리과의 경우 교과와 성격상 다른 교과에 비해 통일교육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 윤리교과는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윤리과의 통일교육은 통일문제, 민족통일의 조건, 통일 이후의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일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5번째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국가와 윤리' 단원에 기술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일부 내용에서도 통일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 (4) 대학교

대학 통일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과 더불어 통일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이 주로 비전문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대학교 통일교육은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교육 부문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통일교육을 심화시키는 이중적 기능을 맡고 있다.

통일보다는 안보교육이 강조되었던 교육 체계 아래서 대학에서도 통일교육보다는 반공교육이 강조되었다. 1990년 문교부가 대학 국민윤리 과목의 존재 여부를 대학의 자율에 일임함에 따라 국민윤리 과목이 대학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민주시민의 윤리, 현대민주주의론, 현대정치와 이데올로기, 북한학, 한반도 통일론, 한국정치론 등의 국민윤리 대체과목들이 점차 개설되어 통일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 다. 사회 통일교육

통일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준비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학교 통일교육과 더불어 성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일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관련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 형태상으로 정부주도형, 정부지원형, 민간주도형, 종교기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일원 산하 통일교육원은 정부주도형의 대표적 형태이며, 정부 각 부처의 교육원 및 연수원도 공무원 연수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정부지원형의 형태로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자문·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도 일반국민, 교원, 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민간주도형 사회교육단체로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4. 통일교육 개선방안

#### 가. 개념 및 목표

한반도 통일이란 국토 분할, 통치권 분할 등이 해소되어 평화적 방식에 의하여 통일 민족국가가 건설되는 것은 물론, 민족간 이질성 증대가 사라져 사회문화적 통합까지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일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은 남북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하여 민주적 통일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행위규범, 절차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통일 전후과정에 대한 판단력을 제고, 통일과정에 동참시키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교육의 목표는 우선 한반도 통일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시민의식의 배양, 통일 당위성의 인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기반구축 및 통일후 국민통합 등을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나. 기본방향

첫째,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은 합리적인 통일대비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더불어 통일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교육은 민주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통의 가치를 발견해나갈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통일교육은 국민들에게 특정 이념체계 및 정책을 주입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통일문제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들의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일곱째, 독일통일후 후유증을 볼 때 우리의 통일교육은 통일이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를 확대·발전시키고 상호개방과 개혁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정책적 합의를 도출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다. 대상별 개선책

### (1) 초·중·고등학교

향후 학교 통일교육은 국내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평화통일과 통일과정 및 통일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북한체제와 북한주민들을 분리시키면서 동질성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다양한 통일논의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할 경우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 및 남북한 비교, 통일노력 등의 내용은 통일교육 차원에서 더욱 보강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경우 통일후 삶에 대비하는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에게 ‘통일사회에의 적응’에 관한 내용도 통일교육의 주제로 보강시켜야 할 것이다.

중학교 도덕과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과 연계한 민주 시민교육이 부족하므로 민주 시민교육을 보강해야 한다. 중학교 통일교육은 도덕교과에 집중되어 있으나,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중학교 국어과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내용은 주로 분단, 북한, 이념, 통일정책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아직 학문체계로나 교과체계로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까지 통일교육은 이데올로기 교육방식에 치중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도덕교육적 접근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통일문제는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교육방식으로 주입식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육부는 통일교육의 방식으로 비교 모형, 개념 모형, 탐구 모형 등을 학습내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수업내용의 과중, 자료 부족 등 제반 여건의 부족으로 학습 현장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탐구수업모형이나 협동학습모형 등 학습자 중심의 체험적 수업을 도입해야 한다.

수능시험 도입이래 통일 관련 문제가 입시문제에서 배제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영수 우선의 교과과정 및 입시배점의 비중문제를 조정하여 고입 연합고사 및 대학수학능력 시험, 대학별 논술시험 등에 통일 교육과정을 반영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통일에 관한 시사 자료나 각종 시청각 자료들은 풍부하게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 (2) 대학교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강의 제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부족한 편이다. 대학 통일교육의 경우 구조와 체제 중심의 추상적 차원에서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를 대학에서 시급히 확보하고 육성하는 한편, 이러한 연구인력을 통해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교육 교과목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대학 통일교육은 교육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대학 통일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각 대학 교양 과정에서 통일관련 교과목을 선택 필수과목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범계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에 북한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 통일 대비 기초지식을 함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학 통일교육도 교수 중심의 주입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통일에 대한 기본정보 및 자료를 인지시킬 경우 교수중심의 강의법과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지식·정보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체제 및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할 경우에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판단력을 제고시키는 토론식 수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 (3) 사회교육기관

사회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교육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나 사회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다른 점은 오히려 통일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원이나 사회교육기관을 관장하는 각 부처들은 사회 통일교육이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통일교육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의식 및 판단능력을 고양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회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적고, 대부분의 사회교육기관이 통일교육을 일회용으로 단기간에 걸쳐 진행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

므로 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및 기업들이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 5. 결론

현재 우리의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 대한 통일대비교육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후 남북한간 통합과정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북한주민들은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남한주민들과 다른 의식구조를 형성하여 왔고, 국가관, 생활방식, 가치·경험체계 등의 상이성과 아울러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남한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과도통합단계에서 북한주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과도통합단계에서 북한주민들을 새로운 체제에 적용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개혁·전환시키는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남한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남·북한의 통합 이해, 통합의 역사적 의미, 남한지역 주민의 물질적 희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시민 교육으로서 남한의 정치·경제체제를 이해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잔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제I장 서론 .....	1
제II장 독일의 정치교육 .....	4
1. 정치교육의 발전과정 및 기본구조 .....	5
가. 발전과정 .....	5
나. 기본이념 .....	13
다. 기본목표 .....	17
2. 통일관련 정치교육의 주요내용 .....	22
가. 독일문제 교육 .....	22
나. 통일후 정치교육 .....	27
3. 시사점 .....	36
제III장 통일교육의 발전과정 및 실태 .....	39
1. 통일교육의 발전과정 .....	39
가. 반공교육 시기 (1948~1987) .....	39
나. 통일·안보교육 시기(1988~1991) .....	43
다. 통일교육 시기 (1992~) .....	44
2. 학교 통일교육 .....	46
가. 초등학교 .....	46
나. 중학교 .....	49
다. 고등학교 .....	52
라. 대학교 .....	54
3. 사회 통일교육 .....	57

제Ⅳ장 통일교육 개선방안 .....	63
1. 개념 및 목표 .....	63
2. 기본방향 .....	66
3. 대상별 개선책 .....	70
가. 초·중·고등학교 .....	70
나. 대학교 .....	79
다. 사회교육기관 .....	84
제Ⅴ장 결론 .....	87
참고문헌 .....	93

## 제 I 장 서론

우리는 한반도가 분단되면서부터 통일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다. 광복이후부터 통일교육은 방공교육,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국방·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 등으로 변천·사용되어 왔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데올로기 갈등은 급기야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남북한간의 관계는 통일을 위한 화합보다는 대결과 경쟁의 논리가 그 중심 축을 이루어 왔다. 이 결과 남과 북은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따라서 해방 이후 80년대 말까지 30여년간 지속된 제1 단계 통일교육은 민족적 측면이 강조되는 통일교육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반공교육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체제간의 우열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통일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모함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우리의 통일교육은 남북대화 시대에 알맞게 종래의 반공교육을 개편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반공교육으로부터 적극적인 통일 대비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모든 차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 및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사회문화의 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한 성숙되고 책임감 있는 인식의 틀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올바른 판단력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여 통일을 대비한 정치교육의 실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2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통일 후 사회주의 체제하에 형성되어온 북한주민의 의식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남한 주민들과 크게 차이를 나타낼 것이며, 남북한의 현격한 소득격차가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열등감을 자아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후 남북한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될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통일문제와 관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추진 신념을 확립하며, 통일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과거 통일교육은 단시간 내에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지속성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일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이 국민들에게 특정 이념체계 및 정책을 주입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통일문제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들의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교육은 정부시책의 홍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통일논의의 과정에서 민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적 측면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외에도 통일교육이 단순히 통일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독일의 통일교육을 사례연구로서 추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한국에서의 통일교육 전개과정을 살펴본 다음, 통일교육의 실태 분석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회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는 제Ⅳ장에서는 우선 통일교육의 개념 및 목표를 서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책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결론에서는 통일후 북한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실태를 연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의 성격상 경험적 연구방법론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단 극복이라는 소극적 목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에서 민족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고 민족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국가 건설의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제II장 독일의 정치교육

독일은 40여년에 걸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마침내 통일을 달성하였다.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 형태로 이루어진 독일통일은 우연이 아닌 필연의 결과였다. 서독의 체제는 동독에 대해 모든 면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확립하고 있었다.<sup>1)</sup> 동독주민들은 동서독간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우열관계를 인식하는 한편,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으로 인하여 소련이 동독정권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마침내 민중봉기를 통하여 서독체제를 통일국가체제로 선택함으로써 독일통일이 달성되었던 것이다. 독일통일의 내적 요인은 동독에 대한 서독체제의 절대우위 확보이다. 특히 서독의 정치교육은 서독사회의 발전을 촉진시켜 내적 통일기반의 조성에 상당 정도 기여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독일통일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장벽은 통일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극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40여년 동안 교조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동독의 사회주의 이념과 질서가 통일에 따라 급격히 무너졌고, 다원화된 정치질서와 새로운 자유시장질서에 대한 적응압력은 동독주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심리적인 불안과 함께 서독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

1)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제도는 동독의 계획경제체제와는 달리 고도의 생산력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자유경쟁의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동독에 대한 체제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서독에서는 자유, 인권, 정의 등에 입각한 법치국가적 질서가 유지되고 민주적 정치문화의 기반 위에서 정치·사회세력간의 정치적 갈등이 성공적으로 관리되었다. 반면, 동독 정치체제에서는 당과 관료 등 지배층의 권력독점 때문에 균형 있는 정치발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정치체제상의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독지역 주민의 심리적 불안과 이질감은 극우적 성향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등 반사회적인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동독주민들의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여 독일정부는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일체감을 실현하고 동독지역 주민을 새로운 사회질서로 통합시키기 위해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정치참여 능력과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개인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의 가치 및 제도를 이해·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정치교육은 그 내용 면에서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운영과 체계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1. 정치교육의 발전과정 및 기본구조

### 가. 발전과정

#### (1) 의식화 교육 (1945~1949)

독일에서 국가사회주의가 폐망한 이후 승전국간에 합의되었던 것은 독일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치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일이었다. 승전국들은 재교육을 통해 독일인의 사고를

## 6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지배하고 있는 국가사회주의의 막강한 영향력을 제거하고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치교육은 승전국들의 독일 점령 정책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교사를 재교육시키고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는 등의 교육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sup>2)</sup>.

### (2) 철학적·교육적 기초 확립 (1949~1964)

서독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서독의 각 주들은 문화주권의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관장하였다. 정치교육을 위한 기본지침은 1946년 최초로 헤센주에서 마련되었다.<sup>3)</sup> 각주 문화부장관 회의에서는 1950년 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정치교육에 관한 임시법이 의결되었으나, 이 법안은 민주주의 단어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극히 소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55년에서야 비로소 연방정부와 주정부 합동으로 구성된 독일 교육위원회는 민주적 정치교육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적극적 정치교육을 위한 노력은 교육계로부터 시작되었다. 독일의 민주적 전통이 국가사회주의의 지배로 인해 단절됨으로써 정치교육은 물론 일반교육의 철학적·교육학적 기초를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이 교육계에서 태동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교육, 공민교육 및 양심교육 등의 분야로 세분된다.

사회교육에 관한 토론은 외티너(Oetinger)가 1951년 발간한 「정치교육의 전환점: 교육적 과제로서 동료의식(Partnerschaft)」<sup>4)</sup>이란 저서

2) 의식화 교육에 대해서는 K. Boltheadung., *Wage und Zizzle politischer Bildung in Deutschland, Eine Materialsammlung zur Entwicklung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n Schulen 1871~1965* (München: 1965) 참조.

3) W. Mickel, *Politische Bildung an Gymnasien 1945-1965* (Stuttgart: 1967), p. 17.

4) F. Oetinger, *Partnerschaft. Die Aufgabe der politischen Erziehung* (Stuttgart:



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외티너(Oetinger)는 칸트 이래로 국가형이상학을 발전시킨 독일철학의 국가교육 및 신이상주의 전통을 청산하고 미국식 실용주의<sup>5)</sup>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철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리트(Litt)는 외티너(Oetinger)가 정치적 요인으로 권력을 도외시하여 국가권력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육성을 배제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그의 명제를 거부하였다.<sup>6)</sup> 리트(Litt)는 협력을 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둘러싼 투쟁으로 파악하는 한편, 국가는 경쟁하는 다양한 정치질서를 토대로 「힘의 예술적인 균형」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리트(Litt)는 민주주의 교육이란 외티너(Oetinger)처럼 생활형태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결정하는 공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리트(Litt)에 따르면 정치교육의 과제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합리적인 국가개념을 획득시키는 것이 된다.<sup>7)</sup>

발라프(Ballauf)는 정치교육이 개인의 도덕성 배양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sup>8)</sup> 따라서 정치교육은 권력욕 및 물질욕에 사로잡힌 개개인을 교화시키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한 양심형성론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정치수업의 기본과제는 사실을 매개하고 개인의 물질욕 및 권력욕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식에 입각한 민

1956) 참조.

- 5) 실용주의의 기본사고는 진리가 사고의 확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고가 실천에 옮겨짐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고는 항상 행위에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는 주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고가 교육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
- 6) Th. Litt, *Die politische Selbsterziehung des deutschen Volkes* (Bonn: 1958), p. 39.
- 7) *Ibid.*, p. 21.
- 8) Th. Ballauf, "Zum Problem der politischen Bildung in Schule und Volksschule," in *Päd. Rundschau*, (8/1961), p. 441.

주주의 기본개념을 교육시키는 것이다.<sup>9)</sup>

정치교육의 철학적·교육적 기초 확립시기에서는 정치·사회적 현실이 정치교육에 관한 출발점이 되지 않았으며, 정치교육과 특별한 연관도 맺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치교육은 기본목표로서 공동체 교육과 더불어 제도교육을 기본축으로 이루어졌다.<sup>10)</sup> 사회교육론은 「사회적 학습」 개념으로 발전되었으며, 미국식 실용주의는 「연구 학습」 방법론과 추후 개발된 미국식 학습심리학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공민교육은 교육적 목표로 근본적인 것에 대한 통찰력 제고로 발전되었으며, 양심 형성에 관한 개인심리적인 이론은 판단력 형성론으로 전개되었다.

### (3) 사회과학적 정향성 확립 (1960~1970)

이 시기는 이전에 발전된 교육철학적인 이론이 정치교육의 교수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해당된다. 이 당시 사회과학 교사들에게는 정치·경제·사회적 구조분석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서독의 사회현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조감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또한 정치적 교수법도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교수법 개발, 정치교육의 학문화 및 정치화 문제 등이 정치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sup>11)</sup>

이 시기에는 일반 교수법에서 발전된 사례학습법이 처음으로 정치교육 교수법으로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학습이론이 정치교육에 적용

---

9) *Ibid.*, p. 445.

10) W. Mickel/ D. Zitzlaff, (Hrsg.),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1988), p. 18 참조.

11) *Ibid.*, p. 18 참조.

되는 등 정치교육의 전문교수법이 개발되었다. 또한 인접 사회과학을 정치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교육의 학문화가 이루어져서 경제학, 사회학 및 정치학 등의 도움으로 정치교육의 교재를 개발하고 정치·경제·사회체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실분석에 활용하게 되었다.<sup>12)</sup>

1961년부터 시작되는 사회과학의 실증주의 논쟁에 의해 야기된 사회의 안정화 및 변화 가능성에 관한 정치화 개념 논쟁이 벌어졌다.<sup>13)</sup> 예컨대 지세케(Giesecke)는 정치적 참여를 노동분업 사회에 부응하는 목적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린게마흐(Lingelbach)는 이러한 입장을 체제변혁에 대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적극적 시민」의 이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세케(Giesecke)는 프렌켈(Fraenkel)에 의해 발전된 다원주의를 정치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동의체계로서 받아들이는 반면, 비판적·변증법적 이론은 다원주의가 계급지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sup>14)</sup> 이 시기 정치화 개념논쟁의 결과로 발전된 「갈등」과 「비판」 개념은 향후 전개된 정치교육의 중심개념이 되었다. 정치교육의 목적은 정치를 「논쟁」으로 정의 내리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 논쟁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데 두었다. 따라서 정치화란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정치수업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특정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의 제고를 의미한다.<sup>15)</sup>

12) 정치교육은 정치·경제·사회생활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해시킴으로써 시민들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교육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과도 구별되고 이러한 학문의 총합도 아니다.

13) 독일 실증주의 논쟁에 대해서는 Th. Adorno u.a., *Der Positivismusstreit in der deutschen Soziologie* (Neuwied: 1969) 참조.

14) H. Giesecke, *Didaktik der politischen Bildung* (München: 1965), p. 100.

15) R. Schmieder, *Politische Bildung im Interesse der Schüler* (Hannover: 1977), p. 103 참조.

(4) 교수법의 체계화 (1970~1985)

이 시기에서는 피셔(Fischer), 지세케(Giesecke) 등의 다양한 이론적 발전에 힘입어 교수법이 발전되었다. 피셔(Fischer)는 특수성을 토대로 일반성을 인식해나가는 인지와 인식을 통한 사례교육을 정치교육 방식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6)</sup> 이러한 교육방식은 민주주의와 정치의 본질에 관한 통찰력을 제고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지세케(Giesecke)는 정치수업의 주된 대상으로 「갈등 해결」을 들면서 정치교육의 최상목표로 공동결정을 들고 있다. 즉 정치교육은 정치·사회적 갈등상황에 의해 야기된 정치적 문제를 공동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치적 갈등상황의 분석도 정치교육의 주요목적이 되기 때문에 지세케(Giesecke)는 인식론적인 기능과 아울러 행위지침의 역할을 하는 갈등분석을 정치교육의 주요대상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sup>17)</sup> 정치수업은 인식론적인 학습법을 토대로 사고 및 인식도구를 상호 매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정치교육의 범주는 핵심개념, 핵심문제 및 범주적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본문제에 관한 지식의 획득이 정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된다.<sup>18)</sup> 이에 비해 수토(Sutor)는 자신의 교수법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인간존재를 철학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성과 사회성의 변증법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토대로 정치적 합리성의 도달을 정치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였다.<sup>19)</sup> 또한 정치교육의 내용으로는

16) K. Fischer, *Einführung in die Politische Bildung* (Stuttgart: 1973) 참조.

17) H. Giesecke, *op.cit.*, 참조.

18) W. Hilligen, *Zur Didaktik des politischen Unterrichts* (Opladen: 1975), 참조.

19) B. Sutor, *Neue Grundlegung Politischer Bildung*, Bd 1 und 2. (Paderborn: 1984), p. 85.

범주적 교육, 양심 형성, 의사소통 교육 등을 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양심형성 교육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수토(Sutor)는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교육에서 정치윤리로서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로테(Rothe)는 정치교육의 기본내용을 목적과 내용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의도된 내용」으로 정의한다.<sup>20)</sup> 「의도된 내용」은 법, 정치, 경제 등의 전문학문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학문이 선택기준을 제시하는 구조교과과정(Strukturcurriculum)과 상응한다. 로테(Rothe)는 정치교육의 가치기준으로 행위지향성과는 일정 거리를 둔 가치판단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그로서(Grosser) 역시 정치교육의 임무를 정치에 관한 합리적<sup>21)</sup> 판단 능력과 정치참여 능력을 매개하는 데 두고 있다.<sup>22)</sup>

슈미더(Schmieder)는 정치교육의 교육과정을 피교육자의 욕구, 관심 및 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교육목표를 자기인식과 주변환경 인식에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클라우벤(Claußen)은 정치교육의 과제를 주체와 체제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에서 찾았고, 정치교육의 최종목표를 개인의 해방에 두었기 때문에 학습과정에서 계몽, 비판 및 행위 지향성 등을 통하여 피교육자는 정체성, 이성 및 잠재능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23)</sup>

20) K. Rothe, *Didaktik der Politischen Bildung* (Hannover: 1981), p. 23.

21) 합리성은 비판적 합리주의의 학문개념에 의거하여 경험적 진술과 규범적인 진술을 구분하고, 상호연관성과 아울러 역사성을 중시한다.

22) D. Grosser, *politische Bildung* (München: 1981), 참조.

23) B. Claußen, *Zur Theorie der politischen Erziehung im Elementar und Primärbereich* (Frankfurt: 1976), p. 126.

(5) 교과과정론의 수용 (1970~1975)

로빈슨(Robinson)이 미국 교육학 연구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론에 입각하여 정치교육의 교육지침을 비판함에 따라<sup>24)</sup>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소한 학습목표 및 내용의 지도지침이 수정되었다. 교육학의 교육과정론이 정치교육에 수용되어 교육지침의 학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계획성의 증대, 정책결정의 투명성, 문교성의 간섭으로부터 결정권 확보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육지침이 결정되어 교육지침에 관한 노선투쟁도 발생하는 등 교과과정론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6) 생활세계로의 전환 (1975 이후)

1970년 중반부터 청소년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등 새로운 사회화 현상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교수법에 청소년들의 주관적 요인을 상당 정도 반영시켰다. 더욱이 학생들의 동기유발 저하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요망사항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생활세계 및 경험세계 지향성에 입각하여 정치교육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생활세계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sup>25)</sup>이 정치교육의 교수법으로 채택되었다.

---

24) S. B. Robinson, *Bildungsreform als Reform des Curriculum* (Neuwied: 1967) 참조.

25) J. Habermas u.a., *Student und Politik* (Neuwied: 1981) 참조.

## 나. 기본이념

앞에서 논의된 정치교육의 이론 및 개념의 발전과정을 종합해보면 독일 정치교육은 시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의 비판력 및 판단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치참여를 통한 사회의 민주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의 기본이념은 계몽, 참여, 민주화 등으로 축약될 수 있다.

### (1) 계몽

독일의 정치교육은 시민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며, 더욱이 개인의 삶이 사회구조 및 사회정치적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을 인지시킨다. 시민들은 정치교육을 통하여 사회현실 분석능력과 아울러 비판적 이성에 의해 사회현실을 인식한 후 자기 입장을 설정하는 한편, 더 나아가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능력까지도 육성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은 정치교육에 의한 계몽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립과 갈등은 물론 문제의 소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배양한다.<sup>26)</sup> 물론 시민들은 미성숙된 사회의식과 더불어 지배체제의 은폐와 조작에 의해 현실인식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을 통한 참다운 계몽은 이데올로기 비판이다. 이데올로기 비판은 다른 체제의 정치이념 및 국가이념보다는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먼저 비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계몽을 통한 합리적 인식은 비합

26) W. Mickel/ D. Zitzlaff (Hrsg.),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1988), p. 53 참조

리성의 조작인 선동과는 달리 사회의 불합리성을 가려낼 수 있는 의식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다음에 닥쳐올 사회적 현실을 준비함으로써 자율성과 자유를 기반으로 비로소 자기가 속한 사회의 역사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2) 참 여

민주화를 위한 정치교육은 사회구조 및 제도와 관련된 것 중에서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을 밝혀내고 정치적인 참여와 결단으로 이것을 개혁할 수 있는가를 계몽하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상황과 관련된 정치교육의 목적과 기능은 정치적인 조작에 항거할 수 있는 비판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치교육은 사회참여교육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참다운 정치교육이란 오로지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구조와 조직의 불합리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됨으로써 가능하며, 사회적 삶의 형성은 결코 정치교육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인간이 개인 운명과 사회발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게 될 경우 인간은 정치·사회적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과 아울러 개인 운명을 개선시키는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정치교육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참여를 촉발시킨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경우 정치교육은 일반적인 인지교육과는 달리 사회인식의 토대 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교육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단순히 투표 참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투표 이외의 정치참여는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체험하게 하거나 시민들을 과격한 정치활동가로



전략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sup>27)</sup>

일부 이론들은 정치의식의 계몽은 과격한 활동주의를 배태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정치교육은 정치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기초교육이 된다. 만약 정치교육이 기존의 사회관계에 단순히 적응하는 교육으로 전략한다면 정치교육은 시민들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정치태도를 갖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체제에 복종·순응하는 인간만을 양산하는 위험에 노정된다.

그러므로 독일의 정치교육은 시민들이 사회적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정치적 행위의 참여태세를 갖도록 해주고 있다. 갈등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참여의 전제조건이다. 판단능력의 제고에 따른 정치·사회적 참여를 통해 시민들은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단순히 인지적인 차원에서 지식전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정치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방법에 있어서 실천문제가 중시된다. 정치교육은 사회현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정치교육의 성공여부는 단순히 시험과 학과 점수에 의해 평가될 수 없다.

27) Alemann은 정치교육에서 과격한 활동주의가 결코 자유로운 정치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정치적 활동주의가 점차로 감상주의로 전환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정치참여는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시민들이 현재의 정치적 여건을 충분히 통찰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에 감정이 개입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U. Allemann, *Partizipation - Demokratisierung - Mitbestimmung* (Opladen: 1975), p. 59.

### (3) 민주화

서독의 정치교육은 1945년부터 1949년 연합군 점령시기에 기초가 세워졌다. 연합군의 우선적인 관심은 비(非)나찌화교육과 민주주의의 이념교육이었다. 1950년대에서의 서독의 정치교육은 국가권력에 의한 자발적인 복종 대신에 대화와 설득으로, 지배체제의 권위주의는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적인 교육방식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대화적인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이론과 주장들이 타당성을 갖게 되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을 기르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다원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어떠한 특수 목적을 위한 인간상을 주조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익히고 자신이 당면해 있는 사회적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계몽적인 목적을 정치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다.

민주주의 이념은 사회적 삶의 인간화와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의 자의적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은 비판의식을 강화하여 인간에 대한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지배를 제거하여 가능한 한 인간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화를 촉진시킨다. 정치교육은 기본방향을 사회발전에 있어서 사회 지배계층의 관심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물질적 욕구 충족과 더불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생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인간의 자기실현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sup>28)</sup>

선택과 비판의 개방성을 용납하지 않는 정치교육체제하에서는 창의성 있는 시민을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의 정치교육은 시민의 판단이 사회 전체적인 연관으로부터 유리되지 않도록 하며 사회현실 해석에 대한 개방성을 보장한다. 기존의 정치교육은 단순히 지배체제의 권위적 강요에 의한 적응교육이었으나, 전후 마련된 정치교육은 사고훈련의 교육이 되었으며, 자발적인 의식훈련을 통한 결단과 참여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대안을 창안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사회·정치적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인식이 있어야 하며, 또한 객관적인 사실인식은 어떤 특수한 지배체제의 관심과 의도에 의해 채색되지 않는 객관적인 지식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 다. 기본목표

독일의 정치교육은 시민들에게 정치·사회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발전의 촉진시키거나 가능하게 하는 의식, 행동방식, 태도 등을 형성·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정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마다 다르나 기본방향은 유사하다. 예컨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교육부의 정치교육 기본방향<sup>29)</sup>은 전통적인 사상과 가치체계에 맹목

28) G. Stein, *op.cit.*, p. 69.

29)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정치교육지침은 한국교육개발원, 「독일의 교육통합」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2), pp. 81~122에 수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교육정책이 주마다 상이성을 지니고 있으나 상세한 비교분석은 다음으로 미루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정치교육지침에 의거하여 독일학교

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sup>30)</sup> 즉 독일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기본목표는 시민들이 사회적 생활환경을 극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치교육은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재적 지식의 획득, 사회에 대한 인지 능력 배양, 근거를 가진 판단력 제고, 행동에 따른 결과 평가, 책임감 있는 결정과 행동의 수행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sup>31)</sup>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교육은 정치기구, 정치과정에 관한 지식, 헌법상의 국가관, 정치·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식 등을 인식하도록 교육시킨다.<sup>32)</sup> 또한 독일 정치교육은 시민들의 정치의식 형성을 촉진·저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실시되는 한편, 수업의 주제는 구체적·실재적인 경험 및 관심과 더불어 미래의 생활환경을 전제로 선택되어진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인간의 존엄성, 인권, 민주적·사회적 법치국가, 연방의 통치구조 등 기본법의 원칙을 존중한다. 독일 기본법 내에서 정치교육이 실시된다는 점은 정치교육의 영역이 기본법에 의해 제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은 정치적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적·제도적 질서는 정치교육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정치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의 과제는 법규범의 타당성과 변화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이미 획득한 권리 및 제도들을 지키기 위해 진력하고 기본법이 규정한 정치질서를

---

정치교육의 목표를 분석한다.

30) 한국교육개발원, 「독일의 교육통합」, p. 82.

31) 위의 책, p. 83.

32) 위의 책, p. 88.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 및 규정을 변경시키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에서는 정치의 개념을 단순히 권력 투쟁으로 보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측면으로만 보지 않고 정치의 형식, 정치적 행동의 내용, 대상, 목표,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정, 정치제도 등 포괄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정치·경제·사회적 질서가 갖는 강제와 지배관계를 아무런 검증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 및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배질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관계, 규범 및 가치관 등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즉 정치교육은 사회의 탈정치적 경향을 억제하고 정치적 결정이 자주 가치방입적인 과학 기술적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규정, 제도, 지배관계 등의 의미, 목적, 필연성 등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다.<sup>33)</sup>

모든 사회적 질서는 사회 성원들의 행동과 태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 행동방식, 규범 등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 정치교육은 현재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탐색하도록 시민들을 교육시킨다. 현실의 「비판적 탐색」이란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정치·경제·사회 질서에 대한 관점에 근거하여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실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교육을 받는 시민들은 정치현실과 이상적인 정치형태간의 갈등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한편, 권력남용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대항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독일의 정치교육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 개

---

33) 위의 책, p. 97.

선책을 계획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탈정치화는 물론 극단적 무력화 모두를 배제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정치적 문제의 분석과 아울러 해결을 모색하도록 실시된다. 그러나 정치교육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규범적 지식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적 상황<sup>34)</sup>에 대한 쟁점 이해능력을 배양시켜 자신의 이해관계 및 입장을 개진하고 자신의 입장에 부응하는 정당을 지지하도록 실시된다. 특히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자신의 이해관계 및 입장을 개진할 경우 다른 사람은 물론 전사회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시민들은 정치교육을 통하여 특정 이해관계가 어떤 경우 사회를 위해 유보되어야 하는가를 평가하며, 어느 이해관계가 공익으로 위장한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독일 정치교육은 개인의 행복관을 발전시키고 이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자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행복이란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조건을 필요로 한다.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전체주의 사회와는 달리 다양한 행복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의 행복관을 강요하거나 이를 정치적인 권위를 통해 절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은 보편적인 규범을 지닌 행복관을 강요하지 않고 타인의 관점도 존중하면서 자신의 행복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독일 정치교육은 국제적으로 다른 민족의 생존권과 독립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제적 안전과 정당한 국제질서를 위해 공헌하는 자세의 함양을 추구한다. 따라서 다른 사회의 삶

34) 갈등은 사회생활의 보편적 현상이다. 정치교육은 갈등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 이해관계 및 권력관계의 대립 등의 갈등의 근본원인을 인식하는 능력, 헌법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갈등 해결 형식을 교육시킨다.

의 형태, 사고, 습관, 가치척도를 배척하지 않는 자세의 함양, 다양한 발전상태에 있는 국가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인식하는 능력과 아울러 국제정치의 구조적 토대와 분류를 인식하는 능력의 배양은 정치교육의 주요목표가 된다.

정치교육은 환경문제와 같은 미래의 생활여건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갈되어 가는 자원문제, 날로 악화되는 환경문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 문제 등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이외에도 노동의 위상도 정치교육의 대상이 된다.

전후 서독에서 체제개혁과 더불어 정치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서독 주민의 국가의식은 하기의 <표 1>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점차 발전되어 왔다.

<표 1> 서독주민들의 국가의식 변화<sup>35)</sup>

	1959(%)	1978(%)	1988(%)
정치제도 및 헌법	7	31	51
경제	33	40	50
사회보장제도	6	18	39
주민들의 인성	36	25	-
과학분야	12	13	37
예술분야	11	10	22
기타 및 무응답	43	39	50

자료: David P. Conradt, "Changing German Political Culture", *The Civic Culture revisited*, eds. by G. A. Almond & S. Verba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p. 230; David P. Conradt, *The German Polity* (N.Y.: Longman, 1993), p. 55. 김학성, "통일문화연구의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 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재인용.

35) 각항의 백분율을 합산한 결과가 100이 넘는 이유는 중복된 질문 때문이다.

2. 통일관련 정치교육의 주요내용<sup>36)</sup>

가. 독일문제 교육<sup>37)</sup>

학교 정치교육에서의 독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치교육에 대한 목적, 내용, 방법 등과 관련된 학술논쟁이 가열되면서 약화되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서 사민당정부에 의한 신동방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1978년 서독연방의회 내독관계위원회는 독일문제에 관한 정치교육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학적·정치학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sup>38)</sup> 이 결과 독일문화교육성 협의회(Kulturministerkonferenz:KMK)는 독일민족의 통일의식을 계몽·발전시키려는 목적하에 독일문제 교육지침(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을 합의·발표하였다. 독일문제 교육지침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통일

36) 독일의 정치교육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는 정치교육의 기본내용은 통일대비 정치교육으로서 통일교육과 통일후 동서독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에 한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37) 서독의 경우 통일교육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통독후 독일통일을 회상해 볼 때 독일문제(Deutsche Frage)에 관한 교육이 실제로 통일교육으로 기능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기에서는 편의상 독일문제 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대체하였다.

38) 연방의회, 연방정부, 대통령 및 연방헌법재판소 등은 독일민족의 자결권 행사를 통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독일 연방의회는 1972년 5월 10일 공동결의문에서 무력의 포기, 현존하는 국경선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 민족통일의 평화적 달성 등을 선언하였으며, 독일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조약, 즉 동방조약, 기존조약, 모스크바조약 등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조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서독 대통령 Walter Schell은 독일민족의 존속과 독일통일은 역사가 독일민족에게 제시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독일통일의 출발점은 민주적인 사회적 법치국가의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독일통일에 관한 사고는 자유에서 출발해야 하며, 더 이상 타민족을 지배하려는 권력지향적 사고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개발연구원, 「독일교육통합과 과제문제점 분석연구」(서울: 교육개발연구원, 1993), p. 110 참조.



이 가까운 장래에 달성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로 인간의 존엄성과 내면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은 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한 동방정책에 따라 동독정부의 실체만은 인정한다는 합리론에 기초하여 독일내 두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한다.<sup>39)</sup>

과거 독일문제를 독일위주로만 생각하던 사고방식은 독일분단이 유럽평화와 안보가 지속되는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고로 전환되었다. 동서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독일의 분단은 양진영으로 유럽의 분단을 의미하므로 통일로의 접근은 유럽에서의 평화유지와 긴장완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sup>40)</sup>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독일문제 교육지침은 서독의 독일정책이 유럽의 평화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교육의 주안점으로 인지시켰다.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서독의 신동방정책과 아울러 독일정책의 핵심적 명제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서독의 독일정책에 따르면 주요 통일 방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고 있다. 첫째, 통일을 위한 외부적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유럽평화가 유지되는 외적 조건하에서 양독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마지막으로 독일민족으로 하여금 체제비교를 통하여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데 있었다.

특히 서독의 동방정책은 「작은 걸음의 정치」를 구사하여, 동방정책의 실질적 구상자인 에곤 바르가 시사한 것처럼 「접근을 통한 변화」를 꾀하여 「공산주의는 극복되어지지 않고 다만 변화되어진다」는

39) KMK, *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 (Bonn: 1978), p. 4.

40)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40.

정책 기조 아래 실제적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신동방정책은 안정된 양독관계를 보장하는 가운데 체제의 우위를 자연적으로 증명한뒤, 독일국민이 자결권을 행사하여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sup>41)</sup>

독일문제 관련 교육지침은 독일분단의 원인을 히틀러 국가사회주의로부터 찾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국가사회주의의 패망과 더불어 연합군의 진주로 인해 독일의 분단은 시작되었지만 민족통일을 위한 독일민족의 노력은 정당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sup>42)</sup> 이 지침에서 국가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고 타민족을 강점하는 팽창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서독의 독일정책은 종족의 우월성을 토대로 통일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민족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동독인들도 독일민족으로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 등을 통해 서독인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주시시키고 있다.<sup>43)</sup> 역사, 언어, 문화 등에 대한 공동의식은 하나의 국가민족(*Staatsvolk*)을 이루고 있지 못하였으나, 1913년 7월 22일자 독일 국적법에 따라 단일독일 국적 입장을 존속시켜 서독인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수업시간에 동독의 정치·경제·사회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동·서독체제 비교를 서독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기준으로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44)</sup> 따라

41) 1983년이래 집권하고 있는 기민당의 콜수상도 사민당이 착수한 통독정책과 동방정책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1983~1984년 두차례의 차관공여, 경제협정 및 문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독과 접촉·교류의 폭을 확대하였다.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p. 91 참조.

42) KMK, *op.cit.*, p. 8.

43) *Ibid.*, p. 9.

서 서독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서독자본주의를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형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체도로 구성되어 있는 체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서독정치체제를 자유, 인권, 정의 등에 입각한 법치국가적 질서가 보장되고 민주적 정치문화의 기반 위에서 정치·사회세력간의 정치적 갈등이 성공적으로 관리되었던 반면, 동독정치체제에서는 동독의 지배층이 당에 의한 관료주의적 권력독점을 고수하여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는 면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켰다. 또한 정치교육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체도를 동독의 계획경제체제와는 달리 고도의 생산력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자유경쟁의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측면의 체제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동독지역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서독인들의 인도주의적 의무임을 가르치고 있다.<sup>45)</sup> 동독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유엔의 인권협정 및 헬싱키 협약 등에 가입한 바 있지만 거기에 명시된 본질적인 인권보장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이 당하고 있는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독일 기본법상의 민족적 목표 설정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더욱이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인권문제 제기가 구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정치교육이 동독정부 독일정책 및 통일정책의 폐쇄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46)</sup> 동독 공산당 서

44) *Ibid.*, p. 11.

45) *Ibid.*, p. 15.

46) *Ibid.*, p. 10.

기장 호네커는 체제대결에서 점차 수세적 위치로 전락하면서 서독 및 서방세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1971년 6월 동독사회주의통일당 제8차 전당대회에서 동독민족을 「사회주의적 독일민족」으로 강조하는 반면, 서독민족을 「자본주의적 민족」으로 각인함으로써 2민족 2국가체제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동독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교육은 동독정부의 독일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편, 동독주민들이 동독사회주의체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독일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sup>47)</sup>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동독인들도 동독의 발전에 대해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으며, 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sup>48)</sup> 이러한 교육지침은 동독인에 대한 서독인들의 심리적 우월성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으며, 또한 서독인과 동독인과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이바지하였다.

독일문제 관련, 정치교육은 시민들에게 독일분단의 문제는 물론 독일문제의 국제적 차원을 인지시켰다.<sup>49)</sup> 시민들은 독일문제 관련 정치교육을 통하여 독일문제에 관한 현실 인식, 문제해결 시도, 미해결 문제 등을 인식하고 미래의 성숙한 시민으로 독일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특히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동서독 관계를 친구와 적으로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과거 독일문제의 원칙으로 설정된 냉전적 관계는 청산되었다.

47) 실례로 1953년 6월 17일 동독주민들의 반체제시위는 무력으로 진압되었으며, 400만 명을 상회하는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한 것을 들 수 있다.

48) *op.cit.*, p. 17.

49) *op.cit.*, p. 20.

## 나. 통일후 정치교육

### (1) 동서독지역간 이질화현상

독일의 정치적·제도적인 통일은 행정적·법적 절차를 통해 이미 완료되었으나, 동·서독지역 주민들 간에는 정신적·문화적 이질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는 양지역 주민의 국가관, 생활방식, 가치·경험체계 등이 상이하여 동독지역 주민들이 아직 통일독일의 새로운 정치·경제·문화제도 및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독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적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사항은 5년간의 시차를 두고 한 슈피겔의 여론조사의 결과이다.<sup>50)</sup> 9개항목 조사에서 동독주민들은 91년도에는 치안, 여성권리, 사회적 안정 세 가지 면에서 옛 동독에 높은 점수를 주었던 반면, 생활안정, 과학기술, 학교교육, 직업교육, 의료제도, 주택사정 등 여섯 가지 항목은 서독이 우월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95년 조사에서는 생활수준과 과학기술을 제외한 일곱 항목 모두가 과거 동독이 더 나았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동독지역에서는 통일에 대한 실망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런 실망은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번져나가 동독지역 주민의 72%가 2등 국민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고 67%가 마음의 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토로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과 소외감이 통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독일국민의 절대 다수가 독일통일은 잘된 것으로 보며, 동독지역 주민 15%만이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으로 대답했다.

50) *Der Spiegel*, 1995.9.25.

대다수 독일국민들은 경제재건을 통한 생활격차의 해소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반면, 동독지역 주민들이 서독의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민주적 사회·교육제도에 적용하여 서독지역 주민들과 일체감을 이루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물질적 생활수준 격차로 인해 발생한 동독지역 주민의 정체성위기는 양지역간 생활격차가 해소될 경우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질성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서독지역 주민간의 사회심리적 갈등문제는 통일 당시만 해도 서독인들은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긍지를 지녔고 동독인들은 통일 후 서독인들처럼 물질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달성 후 7년이 지난 지금, 서독지역 주민들은 통일세 명목으로 세금부담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 이주민 때문에 발생하는 주택, 범죄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안정 저해를 우려하는 한편, 동독지역 주민들은 현실로 다가온 실업문제, 물가등귀 문제 등으로 심리적 갈등이 증폭되어 동서독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사회심리적 일체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서독지역 주민의 이질화현상과 관련, 서독지역 주민들은 동독지역 주민들이 사려 깊고 친절하지만 독립심이 없고 독창적이지 못하며 우유부단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동독지역주민들은 서독지역주민들이 자립적이고 개방적이며 결단력이 있으나 거만하고 사려 깊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과거 사회체제에 내재된 가치규범의 관성이 사회체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급격한 체제변동의 여파가 양지역 주민의 정서적 감정에까지 침투하며 적대감정으로 표출되고 있는 과도기적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동독교육은 자아실현 및 개성발전을 위한 교육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국민에게 사회주의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였다. 또한 사적 갈등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해소되는 비민주적인 교육현실은 동독학생들의 사고력 저하와 함께 개성상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서독지역간의 교육통합은 서독교육제도가 동독지역에 도입·적용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sup>51)</sup> 이는 만일 동독지역의 교육제도가 서독식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동독학생의 서독유입으로 인하여 서독지역 학교의 학생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독지역 교육개혁은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동독지역 주민을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에 적응하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동독지역의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교육의 일환으로 개인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는 한편, 새로운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교육·과학정책은 폐지되었으며 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육행정의 개편, 연구 및 학자금 보조, 경제교육 개편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교육구에 장학기관이 신설되고 장학관, 교장들이 새로 임명되는 한편, 교수과목 및 교수목표도 크게 개정되었다.

동독지역의 교육제도개혁 가운데 선결문제는 학제변경 문제인 바,

51) 한국교육개발원, 「독일의 교육통합」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2) 참조.

이를 위해 동독지역에 과거 동독의 단선형 학제 대신 서독의 다원적인 학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학제변경은 단시간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1994년까지 기존학제하에서 취득한 졸업증 및 자격증은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동독지역의 초·중등교육은 자연·사회·문화를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창조적인 교수·학습의 장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배후조직으로서 초·중등교육의 제반사항을 결정하였던 자유독일청소년단체와 전위기관 등은 철폐되었고,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등의 정치교육과목, 군사교육제도 역시 철폐되었다. 새로운 외국어교육 방침에 의하여 러시아어는 제1외국어로서의 최우선순위를 상실하고 5학년 학생부터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 1과목을 제1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sup>52)</sup>

구동독대학의 잔재청산과 관련, 신설 5개주 및 베를린 시정부는 일정 경과기간을 설정하여 구체제와 관련된 학과와 연구기관을 철폐하고 해당기관의 연구종사자를 전직 또는 퇴직시켰다. 통독 후 대학정책의 선결과제는 동서독지역간의 대학제도의 단일화문제이다. 동독에서는 기술대학과 특수대학은 존재하나 전문대학이 없기 때문에 전문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동독지역에 전문대학의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동서독지역 주민간의 이질성문제는 40여년간 유지되어 왔던 상호이질적 체제가 너무 급격히 통합되었으며 통합과정 또한 서독체제로의 급격한 흡수통합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동독지역 주민들은 통일 후 자유민주체제로의 조기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열등한 지식·기술에 따른 좌절감, 피해의식 등으로 인해 서독지역 주민들과 비교할 때 많은 갈등·불안에 쌓여 있다. 동독지역 주민

52)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통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306.



의 사회심리적 정체성 위기현상은 특히 동독지역에서의 사회범죄 급증, 네오나치즘 등장, 외국인에 대한 배타의식 및 공격행위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서독지역 주민 역시 엄청난 통일비용에 따른 조세 부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국가경제 발전 전망에 대한 확신 결여 등의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은 통일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겠으나 통일독일의 내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교육이 긴요하게 요망되는 실정이다.

서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동·서독의 통합 이해, 통합의 역사적 의의, 서독지역 주민의 물질적 회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시민 교육으로서 독일의 정치·경제체제를 이해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잔재를 제거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동독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은 민주정치의 과정과 기능을 이해시키고 개인과 국가·사회와의 관계 및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극우파의 과격정치에 대한 비판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sup>53)</sup>

동독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서독지역 주민들의 의식과 상이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의 목표는 동·서독지역 주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정치교육의 내용, 형식, 방법 등은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채택되고 있다<sup>54)</sup>. 이는 동독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받아 온 교육의 영향과 아울러 체제에 대한 생소함으로 말미암아 서독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 방식을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53) 통일원, 「독일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4), p. 109 참조.

54) "Zur Ausgangslage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1994) p. 9 참조.

예컨대 동독지역 학교교과과정 개혁에 있어서 과거 동독의 공민교육의 철폐는 전적으로 타당한 조치이나 서독지역의 경우에서처럼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과목이 이를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과정의 통합과정이 과거 동독의 권위주의를 또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로 대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새로운 교수계획 자체가 권위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동독지역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권위에 의한 지시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주도력, 자율성, 창의력 등에 입각한 새로운 학습방법의 습득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관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남아 있다. 정치교육의 기본적 입장은 동독지역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력 제고를 통해 이들 잔재를 처리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은 프랑스혁명, 산업혁명, 바이마르공화국 등과 같은 학습단위를 도입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서독의 역사교과서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인식능력이 확대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인식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sup>55)</sup>

동독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은 동독지역 주민들이 과거의 부담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정치교육은 모든 동독지역 주민의 생활영역 내에 남아 있는 「당의 진리규정의 독점성」 잔재를 제거,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며,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는 일상생활을 탈정치화하도록 그 방향이 설정되었다. 정치교육은 또한 국가의 명령에 익숙하여 늘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동독주민들을 「보호문화」(Nischenkultur)로부터 탈피하도록 교육시킨다.<sup>56)</sup>

55) 한국교육개발원, 「독일교육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연구」, p. 306 참조.

56)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통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p. 302 참조.

정치교육은 민주사회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 없고 또 갈등을 일방적으로 은폐할 수도 없으며, 서로의 이해를 표출하고 관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되 궁극적으로는 타협을 해나가는 「민주적인 논쟁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특히 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결성된 다원적 정당구조에 익숙해지고 정치에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고무하고 있다. 정치교육의 방향은 동독지역 청소년층에서 만연되고 있는 정치적 무관심과 소비·향락문화에 대한 심취문제를 해결하도록 설정되었다.

한편 정치교육은 동독주민들에게 사회적 시장경제제도를 이해시키고 동독체제하의 체제순응적인 행동양식을 시장경제에 맞는 창의적이고 책임이 따르는 행동양식으로 전환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동독지역에서의 극우세력의 대두와 사회범죄의 증가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물질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최선이나, 차선책으로는 동독지역 주민의 체제적응문제를 해소하고 폐쇄적 시야를 국제주의적으로 넓히는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정치교육은 동서독지역 주민의 경험 및 인식상의 차이를 극복하여 정신적·심리적 일체감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시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즉, 위로부터의 일방적 행정지침에 의한 강요형태의 정치교육은 히틀러 독재로부터 통독이 될 때까지 이미 50년 넘게 독재체제하에서 고통을 받았던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독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방법상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정치교육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독지역 주민들이 「정복자」로서의 우월의식이나 동독주민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정신적·심리적 분단의 극복과정에 동참하여 동독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이와 관련 서독지역의 주민들 역시 정치교육을 받고 있다.

정치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는 각종 교육·홍보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독일연방공보처가 수행하고 있는데, 홍보의 주요지침은 독일통일이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통일비용 조달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통일로 인해 사회안정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하는 서독주민을 상대로 독일통일은 장기적으로 경제부흥을 가져오며, 통일사회의 건설은 청소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새 질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정체성 위기에 처해있는 동독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통일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수립되고 법치국가와 자유로운 인간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며 경제번영을 가져와 사회안정이 도모될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통독후 정치교육 담당기관으로는 정규 교육기관 이외에도 과거 서독이 했던 것처럼 연방정부는 주로 연방공무원 및 연방군을 대상으로 주정부는 경찰,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산하기관으로 설치된 정치교육본부는 일반주민, 계약직공무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임의 참여방식에 입각하여 정치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단체의 교육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교육본부는 모든 정부사업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동독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사회단체 가운데 교회가 동독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교육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자매결연을 이용하여 동·서독지역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남의 광장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동독지역에 결여되어 있는 문화적 사회간접자본(Kulturelle Infrastruktur)을 확충하는데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각종 협회·단체 등 자발적인 이익단체와 동호인 클럽들도 동독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있고, 이 또한 동서독지역 주민의 이질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동독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일부 동·서독인들간에 맺어져 온 그간의 간헐적 대면관계가 회합으로 연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독일 정치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간등록 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신청 및 참여를 통해 정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시기에 도 순발력 있게 강연회, 대화 씨클 등을 통해 정치교육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57)</sup>

정치교육 방법으로는 강연회, 토론, 영화 상영 등의 다양한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대개 주말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동독지역 주민들은 세뇌교육에 혐오를 느끼고 있어서 「누구에 의한 교육」에는 반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방식 가운데 강사를 통한 강연·토론 프로그램은 별로 효과가 없다. 교육자료는 정치교육본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서적, 잡지, 영화, 그림, 사진 등이 최대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자료에 사용하는 용어는 서독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상의 어려움이 있다. 10~20쪽 분량에 해당하는 기초 교육자료는 서독 인문계 중학생 수준으로 제작된다.

57)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p. 391.

### 3. 시사점

독일은 장기간의 교류·협력 경험을 통해 관계개선을 도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하고 있다. 실질적인 교류·협력 경험이 없는 남북한의 경우에는 급진적인 흡수통일이 실현될 경우 통일 후유증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과 같은 급진적 흡수통일을 지양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독은 통일 이전에 「사회적 법치국가」의 체제개혁을 통해 통일의 대내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독일통일의 내적 요인으로 기능하였던 동독에 대한 서독체제의 절대우위 확보에는 민주적 정치교육의 역할을 제외할 수 없다. 서독은 민주주의 근본원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운용, 과거극복문제, 제3세계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경제지원정책, 사회갈등해소 등에 대한 문제들을 정치교육의 주요내용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사회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동독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절대우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특히 서독의 통일관련 정치교육은 1민족·2국가·2체제하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추구하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에 접근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다루므로써 기능주의적 접근에 따른 평화통일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후 독일은 동서독지역 주민들간의 정신적·심리적 동질성 확보를 정치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정책의 일환으로 남한체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우선 남한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통일후 증폭되고 있는 동서독 주민간 심리적 갈등과 아울러 새로

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동독지역 주민들의 정체성 위기를 고찰해 볼 때 통일 후 남북한에도 이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남북한 주민을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통일대비 정치교육은 분단 극복이라는 소극적 목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에서 민족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 등이 구현되어 민족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국가 건설의 정신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통일대비 정치교육은 통일국가 건설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는 한편, 통일과정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 능력, 태도 및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대비 정치교육은 민주사회의 건설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문화가 권위주의적 유교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교육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민주적 정치문화의 형성에도 많은 비중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sup>58)</sup>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및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교육과정을 포괄해야 한다. 또한 통일대비 정치교육은 건전한 시민문화의 육성에 필요한 기구나 제도의 정착과 함께 정치·사회적 의식 및 행위양식까지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해야 할 것이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국가사회주의가 패망한 이후 독일의 정치체제는 「민주적 법치국가」로 전환되어 갔고 사회·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체제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독일의 이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민주적 정치교

58) 김충남,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교육」; 국민윤리학회편, 「정치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1992), p. 321 참조.

육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은 우리 체제의 개혁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된 채 정치교육을 실시할 경우 정치교육은 단순히 체제순응 교육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순응식 정치교육의 폐해는 독일의 경우 국가사회주의 치하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우리의 경우에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는 물론 아직 그 잔재가 남아 있는 현체제하에서도 완전히 일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면을 비추어 볼 때 민주적 정치교육은 체제개혁을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적 정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통일대비 민주적 정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제의 민주화개혁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정치교육은 국가적 차원의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국민 윤리만을 강조하는 등 현실과 이론간의 괴리가 심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현실과 교육목표와의 부합성 정도가 커야 할 것이다. 피교육자가 직접 사회로부터 인식하는 사회적 학습의 교육 효과가 심대하기 때문에 정치교육의 주변환경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등 유교적 권위주의 전통이 아직도 탈색되고 있지 않은 교육환경의 민주화도 필요하다.



## 제Ⅲ장 통일교육의 발전과정 및 실태

### 1. 통일교육의 발전과정

통일교육은 그 동안 여러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광복이후부터 통일교육의 명칭으로는 방공교육,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국방·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대비교육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데올로기 갈등은 폭력을 수반한 투쟁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급기야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남과 북은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이를 주민들 사이에 전파시키며,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의 관계는 통일을 위한 화합보다는 대결과 경쟁의 논리가 그 중심 축을 이루어 왔다.

통일교육이 적극적인 통일 대비 교육으로 전환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 남북대화 시대에 알맞게 종래의 반공교육을 개편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면서부터이다. 그동안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공교육 시기」, 「통일·안보교육 시기」를 거쳐 「통일교육 시기」로 변화해 왔다.

#### 가. 반공교육 시기 (1948~1987)

분단 이후 통일관련 교육은 반공교육 → 통일·안보교육 → 통일교육으로 변천되어 왔다. 해방 이후 80년대 말기까지 30여년간 지속된 제1 단계 통일교육은 민족적 측면이 강조되는 통일교육과는 달리 이

테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반공교육에 치중하였다.

미군정기에는 「일반명령 제4호」에 따라 「신조선을 위한 교육방침」이 정해졌는데 여기에는 반공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남한 정부 수립 이후 북한을 통일시킨다는 명분 아래 반공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남북한간의 갈등구조가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차원에서 반공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반공교육은 체험적 차원에서 학교교육으로 정착되었으며, 1980년대 말까지 통일교육의 기본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6·25 이후 제1차 교육과정(1954년)이 만들어지면서 도의교육의 일환으로 반공교육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전쟁으로 인해 도덕성이 타락되었고 가치관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이에 따라 도덕교육 항목에 반공·항일의 항목이 삽입되는 등 도덕교육이 강조되면서 도덕교육이 「사회생활」이라는 정규교과의 일부로 취급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해 4·19와 5·16을 거치면서 반공교육과 도덕교육이 일원화되는 등 반공교육이 제도화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 기간(1963~1973)에는 「사회생활」교과의 일부로 편입되었던 「도의교육」과 「반공교육」이 사회생활 교과목에서 「반공·도덕」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독립되었으나 정규교과목이 아니라 비정규교과의 성격으로 취급되었다. 이 시기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 교과활동, 반공·도덕생활, 특별활동 등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도덕과목이 국민윤리로 개칭되었고, 그 후 1969년 문교부령에 의해 다시 「반공 및 국민윤리」로 개명되면서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수단위가 4단위에서 6단위로 확대되었다.<sup>59)</sup>

59) 이순교,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및 교사의 대북한 인식분석: 도덕·국민윤리교과와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29집 (서울: 동아연구소, 1995), p.

제3차 교육과정(1973~1981) 기간 동안에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반공·도덕생활을 ‘도덕과’라는 독립된 교과로 설치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도덕이 ‘국민윤리’라는 이름으로 개칭되면서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국민윤리’가 사회과로부터 독립하여 필수교과가 되었으며, 교과서는 ‘국민윤리’와 ‘자유수호의 길’로 나누어져 있다가 1979년에 다시 ‘국민윤리’로 통합되었다. 이외에도 고조되기 시작한 통일교육의 전담교사와 연구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부응하여, 1977년 서울대학교에 「국민윤리학과」를 대학원 과정으로 설치하고, 뒤이어 1981년도에는 전국의 국립사범대학에 「국민윤리교육과」를 설치하여 교사양성의 기회를 제도화하였다. 이들 신설학과들이 설정한 교육과정은 이념·사상문제, 북한문제, 남북관계문제, 통일문제 등의 교과를 포함하여서 대학에서 통일관련 문제 연구와 전문가 양성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관련 학교교육은 국토통일원이 출범한 후 1970년도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종전의 비정규 교과로 취급되었던 반공·도덕 교과목을 도덕으로 바꾸고 반공을 교과내용의 일부로 포함시켰다.<sup>60)</sup> 이 당시 반공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격멸함으로써 승공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것이었다.<sup>61)</sup>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적 있는 교육, 민족 주체성 교육, 민족문화 창달 등을 포함하는 국민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그전 사회과목에 속해 있던 「국민윤리」 과목을 독립 교과목으로 전환하고 그 시간도 과거의 주 1시간에서 2시간으

192 참조.

60) 박용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통일원 주최 세미나 자료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 방향」 (서울: 통일원, 1994), p. 10.

61) 이순교, 위의 책, pp. 192~93.

로 늘리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통일교육관계 교재 「승공통일의 길」, 「자유수호의 길」 등도 별도로 제공하였다. 또한 1970년도부터 대학에 국민윤리 교과를 설치하고 이를 교양필수 과목으로 개설하도록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화 과정은 국토통일원에 의해 촉진되었다. 통일원은 우선 설립 원년인 1969년도부터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국내의 모든 교육기관의 반공교육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종래의 반공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전환하고 통일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서 「통일교육 교수지침서」가 개발되었다. 통일원은 북한,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문제, 통일교육 등에 관한 각종 연구를 지원하였고, 더 나아가 '72년도 출범한 「통일연수원」에서 각급교육기관 통일교육 전담교사 및 교수들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교수의 자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 실시된 후에는(1981~1987)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반공교육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굳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즉 제4차 교육과정까지 통일관련 교육은 여전히 통일보다는 안보를 강조하였고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는 물론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북한의 공산체제와 대립적인 것으로 정립시키면서 그 정당성을 통일관련 교육을 통해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도 가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실시되었던 통일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반공교육이 중심이 되었고, 적극적인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우리의 대북한 체제역량이 강화되면서부터는 통일관련 내용이 적극

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 나. 통일·안보교육 시기(1988~1991)

한반도 분단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실시되었던 통일관련 교육은 반공교육이 중심이 되었고 적극적인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 운동이 통일운동과 결부되어 반공일변도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으며,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국제정세의 탈냉전적 경향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제5차 교육과정(1987. 6. 30)에서는 반공교육이라는 용어 대신에 통일과 안보를 강조하는 통일·안보 교육이라는 용어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종래의 반공교육은 북한과 공산권을 경계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여 통일 의지를 함양하거나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매우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통일·안보교육은 기존의 반공교육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안보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통일과 안보를 동시에 강조하게 되었다. 국민학교 통일교육의 경우 반공교육 기간동안에는 북한 공산집단의 죄악과 잔인성을 비판하고 있지만, 통일·안보교육 기간 동안에는 극단적인 용어는 피하고 민족의 이질화 문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함

과 동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반쪽으로서 통합해 살아야 할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sup>62)</sup>

그러나 제6공화국 초기부터 통일교육의 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먼저 대학의 필수교양과목으로 국민윤리 교과목이 폐지되어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고, 고등학교의 국민윤리 교과목도 「윤리」로 그 명칭을 바꾸고, 주 2단위의 시간도 1단위로 축소하게 되었다. 또한 각종 고시과목과 공무원 임용 고시과목에서 국민윤리를 제외시키는 등 통일교육 실시 기반과 여건은 축소되었다.<sup>63)</sup>

#### 다. 통일교육 시기 (1992~)

1980년 말부터 남북한이 지속적인 대화와 함께 상호 불신감의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인식과 상호 접근이 필요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환되면서 통일·안보교육의 무게 중심이 통일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92년 새롭게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안보 교육 보다 더 단순화된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적대적 반공교육은 통일과 화해, 북한에 대한 합리적 이해 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대체되었으며,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민족

62) 이순교, 위의 책, p. 193.

63) 박용현, 위의 책, pp. 5~10.

공동체 형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처럼 반공교육 일변도의 통일교육이 통일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전환된 데는 동구 공산권의 붕괴, 독일 통일 등에 따른 북한체제에 대한 우리 체제의 우월성 확인에 있다. 따라서 현단계의 통일교육은 수세적 입장에서 실시된 반공교육과는 달리 통일 달성 및 통일 후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 입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반세기 가까운 분단체제하에서 길들여진 의식과 생활문화상의 이질적 양상이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예측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의 반공교육과 통일안보교육으로 지칭되어온 통일교육으로는 통일지향적인 인간상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길러내는 데는 미흡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치원 교육내용 체계 속에는 통일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사회현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 영역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 유도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sup>64)</sup>.

국민학교의 통일교육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도덕과목의 ‘국가·민족 생활’ 영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내용으로는 학년별 수준에 따라 분단상황, 북한의 현실, 통일의 당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3학년에서는 분단의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4학년에서는 통일조국의 미래모습, 5학년에서는 평화통일의 방법, 6학년에서는 통일을 위한 노력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다.

중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국민학교와 동일한 내용체계를 지니고

64)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 공시 제1992~15호.

있으며, 민족분단의 원인과 배경, 북한의 현실,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과 문제점, 민족공동체 변형, 통일국가의 실현 등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윤리 교과목의 통일과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 ‘민족 통일의 조건’, ‘통일 이후의 전망’ 등이 주요주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서는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정책, 남북한 통일의 장애요인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고, ‘민족통일의 조건’에서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통일환경의 변화, 통일국가 실현의 전제조건, 예상되는 통일 과정과 우리의 자세, 통일 이후의 전망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국가의 역할, 미래사회의 한국인상 등을 다루고 있다.<sup>65)</sup>

## 2. 학교 통일교육

### 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교육목표와 내용은 분단 인식 및 통일 필요성, 통일조국의 미래상, 평화통일의 방법 및 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주로 1학년의 경우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2학년의 경우에는 바른생활 교과 및 국어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내용은 일상적인 생활 경험과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 염원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4·5·6학년의 경우 도덕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3~6학년은

65) 고등교육과정 (1), 교육부 공시 제1992~19.



대상으로 하는 도덕교과에서는 4개 생활영역 중 네 번째 생활영역인 국가·민족생활 영역에서 통일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 도덕 교과는 ‘국가생활’과 ‘통일·안보생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의 비중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가생활과 통일·안보생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도덕 교과는 국가·민족생활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되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3·4·5·6학년의 도덕교육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도모하도록 통일교육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3학년 1학기에서는 2학년의 통일교육과 연계하여 분단현실을 인지시키는 한편,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동질성 차원에서 강조하고 통일시장점을 들어 통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4학년 1학기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통일 의지 제고 및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이 주로 다루어 지고 있다. 5학년에서는 통일방식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방식에서의 남북한의 차이를 핵심주제로 다루고 있다. 6학년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도덕과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남북한의 통일정책, 통일여건 인식, 통일사회에의 적용내용 등은 초등학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대신 「통일을 위한 노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표 2>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관련 학습내용

구 분		제재 및 소재제명	지도 내용	지도 요소
2학년 1학기	비 생 활	11. 통일의 길 · 통일의 필요성 · 통일에 대한 염원	· 분단 이전의 민족 생활 · 민족의 동질성 · 남북 분단의 현실 인식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 가지기
	생 활의 길잡이	11. 북한에 사는 친구들 ·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 염원 갖기	·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 가지기 ·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 북한 어린이들에게 관심 갖기	
3학년 1학기		7. 한 겨레 한 나라 · 현충일  · 우리 나라 땅  ·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할까요 · 실제로 공부해 봅시다  · 더 공부할 문제	· 현충일의 의미를 알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서 아울러 우리 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 남북한 주민이 모두 한 겨레이고, 남북한 모두가 우리 나라 땅임을 알기 ·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통일이 되면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기 · 남북이 한 겨레임을 보여주는 화보를 찾아 확인하기 ·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분단 현실의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4학년 1학기		7. 겨레의 소망 · 새 친구의 다짐 · 통일된 나라로 가는길 ·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 더 공부할 문제	·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 알기 · 분단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통일 의지 기르기 ·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에 대한 글을 통해 조국의 미래상을 그려봄과 동시에 통일 의지 기르기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
5학년		16. 평화 통일을 위하여 · 통일의 방법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평화 통일의 길  · 실제로 공부해 봅시다 · 더 공부할 문제	·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기 ·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예측해 보고, 평화 통일의 필요성 살펴보기 ·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이해하고 통일 의지 다지기 ·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과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 북한이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던 사례 알아보기	평화 통일의 방법

구 분	재제 및 소재재명	지도 내용	지도 요소
6학년	8.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 ·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의 길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실제로 해 봅시다 · 더 공부할 문제	·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기 · 등산과 통일을 위한 노력의 유사성을 살펴봄으로써 통일의 길에 대하여 알아보기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알아보기 · 통일이 되었을 때를 상정하여 서로 간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알아보기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통일을 위한 노력

자료: 이돈희 외, 「학교 통일교육 자료 개발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6).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도덕교과 이외에도 국어 교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과 통일교육 관련 학습내용은 2·3·4·6학년에서 한단원씩 반영되어 있다. 교과서별로 보면 읽기 교과서에서는 통일 관련 내용을 글의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반면, 말하기·듣기, 쓰기 영역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통일관련 내용을 다루기에는 읽기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보다 소재로 다루기가 수월했기 때문이다.

한편,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4·5·6학년 사회과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4학년에서는 「여러 지역의 생활」 단원에서 북한 산간지역의 생활을 소개하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일깨우고 있다. 5학년 사회과에서는 남북한 지하자원 분포 및 통일후 남북한 도로망 건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학년 사회과의 경우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통일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 나. 중학교

중학교 통일교육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도덕교과에서 중점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교의 도덕교과의 네 번째 영역인 국가·민족생활 영역에서 통일교육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점차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하여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족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도덕 교과 통일관련 내용은 분단 이후 계속되어 왔던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교육은 문화 전통적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민족의 주체성 및 통일의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학교 도덕교과에서 통일교육은 종래처럼 통일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오늘날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들과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 민족이 이룩하고자 하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게 하고, 합리적인 통일대비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통일과 안보 두축 가운데 통일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되, 현실적인 안보의 중요성도 고려할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중학교의 통일교육 학습내용은 초등학교의 도덕과의 국가·민족생활영역과 연계되어 보다 심화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도덕에서는 애국심과 민족애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통일의 전망, 통일 조국의 미래상, 통일의 목표, 통일의 당위성, 남북분단의 원인, 경계해야 할 통일관 등이 국가와 민족의 중단원 등에서 일부 논의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도덕과의 경우 제5차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중학교

2학년 도덕에서는 국가생활 내용 및 북한관련 비판 내용이 축소되고, 민족분단의 원인과 배경내용이 신설·보강되었다. 중학교 2학년 도덕과는 「민족통일의 문제와 북한의 현실」이라는 대단원에서 분단의 원인과 배경, 북한의 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 등의 통일관련 내용을 다룸으로써 민족분단의 비극, 통일 과제, 북한 실정 등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에서는 민족공동체의 번영 및 통일국가의 실현 등이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통일 국가의 실현과 세계 속의 한국인 상을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독일, 예멘, 베트남 등의 통일사례, 통일의 당위성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중학교 1학년 통일관련 사회교과에서는 북한지역을 비롯한 각 지방에 대한 지리 내용이 학습 대상으로 수록되었다. ‘북부지방의 생활’ 단원 가운데 ‘북부지방의 변화’에 나오는 ‘남북 경제 교류’를 비롯하여 ‘두만강 유역 개발과 개방화 노력’, ‘관광 산업과 금강산 개발’ 내용은 최근 북한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

중학교 3학년 통일교육은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사교과에서도 통일교육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국사교과의 현대사 부문에서는 ‘광복과 분단’,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과정’에서 국토 분단의 과정, 북한의 공산화, 신탁통치 문제, 북한 공산정권의 수립, 6·25전쟁, 공산군의 격퇴 등의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통일을 위한 노력’이란 주제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의 변모과정이 설명되고 있다.

<표 3>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관련 학습내용

교과목	생활 영역	1학년	2학년	3학년
도 덕	국가 민족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발전과 문화창달</li> <li>· 민족성과 민족정기</li> <li>· 민족 문화의 우수성</li> <li>·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li> <li>○ 애국심과 민족애</li> <li>· 국가 민족과 나와의 관계</li> <li>·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li> <li>· 국가의 상징물에 대한 사랑</li> <li>○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li> <li>· 우리 조상들의 나라겨레 사랑</li> <li>· 민주시민으로서의 나라겨레 사랑</li> <li>· 중학생으로서의 나라겨레 사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분단의 원인과 배경</li> <li>· 남북 분단의 원인과 과정</li> <li>· 민족 분단과 남북한의 갈등</li> <li>· 민족 분단의 역사적 교훈</li> <li>○ 북한의 현실</li> <li>· 북한의 정치적 현실</li> <li>· 북한의 경제적 현실</li> <li>·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실</li> <li>○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과 문제점</li> <li>· 통일 환경의 변화</li> <li>· 남북한 통일 정책</li> <li>· 민족 통일의 당면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공동체의 변영</li> <li>· 바람직한 민족공동체 의식</li> <li>· 민족의 동질성 회복</li> <li>· 민족공동체의 변영과 해외 동포</li> <li>○ 통일국가의 실현</li> <li>·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li> <li>· 통일국가 실현의 과정</li> <li>· 민족 화합과 도덕공동체</li> <li>○ 세계속의 한국인</li> <li>· 민족공동체의 위상제고 노력</li> <li>·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li> <li>· 통일과 변영을 위한 노력</li> </ul>
주당수업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자료: 교육부,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서울, 1992).

### 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윤리과의 경우 교과와 성격상 다른 교과에 비해 통일교육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전의 '국민윤리' 교과와 명칭을 '윤리'로 변경하고 '90년대 초 탈냉전의 국제적 분위기에 의해 국가윤리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이념교육 내용을 수정하였다. 윤리 교과는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윤

리과의 통일교육은 통일문제, 민족통일의 조건, 통일 이후의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일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5번째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국가와 윤리' 단원에 기술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일부 내용에서도 통일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표 4> 고등학교 윤리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학습내용

교과명	단원	대 단원	주 제
윤리	Ⅲ.국가 윤리	가. 국가 이념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본질과 국가관</li> <li>○ 이념의 유형과 전개</li> <li>○ 국가 발전과 이념의 역할</li> <li>○ 공산주의의 쇠퇴와 미래의 이념</li> </ul>
		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 의식과 민족주의</li> <li>○ 민주주의의 이념과 특징</li> <li>○ 민주주의의 원리와 생활 양식</li> <li>○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 윤리</li> </ul>
		다. 국제관계와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관계의 본질과 변화</li> <li>○ 국제 관계에서의 윤리성</li> <li>○ 국제화 시대에서의 우리의 자각</li> </ul>
	Ⅴ.통일의 과제와 전망	가.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li> <li>○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정책</li> <li>○ 남북한 통일의 장애 요인</li> </ul>
		나. 민족 통일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 질서와 통일 환경의 변화</li> <li>○ 통일국가 실현의 전제 조건</li> <li>○ 통일의 과정과 우리의 자세</li> </ul>
		다. 통일 이후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국가의 미래상</li> <li>○ 미래사회의 한국인상</li> <li>○ 국제사회에서의 통일국가의 역할</li> </ul>
주당 수업시간	1시간		

자료: 교육부,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서울, 1992).

고등학교 국사 교과에서도 통일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이란 주제에서 토의학습 과제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점과 현실적인 통일방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고등학교 사회과에는 통일교육을 다루는 전체 비중은 적은 편이지만, 국제화와 한국정치의 과제에서 통일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독일통일 사례를 들어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과정을 비교하도록 하고, 독일 통일과정의 원칙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파악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통일방안의 장단점을 탐구하고 분임토의에서 통일현장을 작성해 보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 라. 대학교

대학 통일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과 더불어 통일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이 주로 비전문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대학교 통일교육은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교육 부문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통일교육을 심화시키는 이중적 기능을 맡고 있다.

통일보다는 안보교육이 강조되었던 교육 체계 아래서 대학에서도 통일교육보다는 반공교육이 강조되었다. 1990년 문교부가 대학 국민윤리 과목의 존재 여부를 대학의 자율에 일임함에 따라 국민윤리 과목이 대학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후 민주시민의 윤리, 현대민주주의론, 현대정치와 이데올로기, 북한학, 한반도 통일론, 한국정치론 등의 국민윤리 대체과목들이 점차 개설되어 통일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민윤리로 대표되는 기존의 대학통일교육은 엄격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이라기 보다는 반공교육이고 안보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윤리를 교양필수로 선정하면서까지 반공·안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의도했던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0년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학생들에게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반공·안보교육이 비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66)</sup>

국민윤리 교과목의 폐지 후 대학 통일교육은 대학교육의 자율성으로 인하여 초·중·고교와는 달리 일률적인 지침에 따라 실시될 수 없으나, 통일원은 1995년 간행 배포한 「통일교육 기본방향」이라는 지침서에서 각 교육 단계별 통일교육 목표를 권고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대학 단계의 통일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산, 통일의 조건과 장애 요소, 통일의 절차와 방안에 대한 이해, 통일 후 국가 건설과정에서 제기될 문제, 통일 후 국가 양태에 대한 신념 확립 등으로 되어 있다. 대학 단계의 통일교육은 유아 및 초·중·고교 단계의 통일교육을 종합 정리해주는 과정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 통일교육은 전국 164개 대학에서 전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관련 교양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정치외교학과, 북한학과, 국제관계학과 등에서 전공교육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64개 대학교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통일관련 연구소 활동, 통일 대동제와 같은 학생 활동, 통일원이 지원하는 대학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 대학생 통일 문제 심포지움 등도 대학 통일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66)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논총』, 제6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53~54.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통일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은 조사대상 103개교 가운데 통일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40개교에 불과하였다.<sup>67)</sup> 그 가운데 8개 대학이 두 과목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였을 뿐, 그 외는 한 과목만을 개설하고 있다. 교과내용은 ‘북한의 이해’, ‘북한학’과 같이 개괄적인 과목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의 정치와 사회 등의 과목이 많았고, 통일문제, 한반도 통일론 등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개설된 과목은 대부분이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야를 다루는 과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5> 참조).

<표 5> 대학의 통일교육 현황 (조사대상 103개교)

과 목 명	강좌수
통일문제·한반도 통일론	10
북한의 정치	6
북한의 이해·북한학	14
북한의 정치와 사회	6
북한 경제	1
북한 사회의 이해·북한 문화	13

자료: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논총』, 제6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주: 북한학과는 제외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독일의 통일 등과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는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드높여 1994년 동국대학교(야간 40명)를 시작으로 1995년 명지대학교(야간 40명), 1996년 관동대학교(주간 50명), 고려대학교(주간 30명)에 ‘북한학과’가 설치되는 등 몇몇 대학에

67) 이우영, 위의 글, p. 56.

서 북한학과가 개설되었고, 1996년 현재 13개 대학에서 통일관련 특수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현재 북한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의 교육과정은 주로 전공기초로 정치학이나 정책학을 채택하고 있다. 교과목은 북한 정치와 체제, 통일정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데올로기 연구, 조선로동당 연구, 북한 지도자 연구 등 북한 정치와 관련된 과목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북한경제 관련 과목, 북한의 사회 및 일상생활·문화 관련 과목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되고 있다<sup>68)</sup>.

북한학과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통일관련 교과목이 교양 과목으로 개설·실시되거나 정치외교학의 전공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 경우 민주시민의 윤리, 현대 민주주의론, 현대 정치와 이데올로기, 한국정치론 등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가치관을 함양하는 과목들이며, 북한학은 북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한반도 통일론은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 주변환경을 이해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3. 사회 통일교육

사회교육은 학교를 졸업한 성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비제도적 교육으로서 설립목적, 운영방식, 교육내용, 수강생 등에서 학교교육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수, 기업연수, 직업훈련, 농민교육, 문화센터 교육, 노인교육, 청소년교육 등 사회교육이 다루는 영역은 대단히 방대하며 실질적으로 전국민 모두가 사회교육의 대상

68) 이우영, 위의 책, p. 58 참조.

이다. 그러므로 사회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면 사회교육을 통해 통일교육은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교육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은 사회교육기관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

통일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준비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학교 통일교육과 더불어 성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일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 사회인들의 경우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후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급변하는 통일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 통일교육은 일반 성인들로 하여금 복잡하고 다양한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의 수준 및 판단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회 통일교육은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갖게 하며,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통일 논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장차 이룩하게 될 통일된 민족 공동체에서의 삶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게 할 수 있다<sup>69)</sup>.

통일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 형태상으로 정부 주도형, 정부지원형, 민간주도형, 종교기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일원 산하 통일교육원은 정부주도형의 대표적 형태이며, 정부 각 부처의 교육원 및 연수원도 공무원 연수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정부지원형의 형태로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자문·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도 일반국민, 교원, 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주도형은

69) 박용현 외, 「통일교육지침서 개발연구」(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89), p. 5.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에서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사회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단체의 목적과 활동내역에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회 통일교육기관의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재정도 취약하여 매우 영세한 편이다. 이에 따라 사회 통일교육은 대부분 단기간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작은 단위로 상호 연관없이 진행되는 등 각 프로그램간에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사회 통일교육은 학교 교육과 달리 현장성을 중시한다. 학교 통일교육은 지식 중심으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사회 통일교육은 생활현장과 직업현장에서 생활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 중심으로 진행된다.

모든 사회교육기관에서 현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원이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서 총 275개 기관중 40%를 밀도는 109개 기관만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연 28만여명의 인원이 평균 2~3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0)</sup>

여기에서는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사회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한다. 통일교육원은 통일원 산하의 통일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통일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장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크게 초청교육과 순회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선 초청연수는 기본교육계획에 따라 연수를 원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며, 연수 대상별로는 전문과정, 일반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실

70) 통일원, 「통일백서」(서울: 통일원, 1995), p. 361.

시하고 있다.

전문과정은 소속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각계 각층의 국민과 학생 및 군인들에게 통일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통일전문위원, 사회교육 기관 교관, 군 정훈 및 민사장교와 교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그 연수내용은 전문성을 갖는 다양한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되며, 연수기간은 3~6일이다. 앞으로 통일교육원의 통일연수는 통일 이후에 대비하는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둘 예정으로 있다.

일반과정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간부 등 각계의 지도자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초적 전달 교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과정이다. 공직자반, 교직자반, 대학생반 및 사회단체 간부 등의 일반과정 연수내용은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북한실상 및 국제적 통일환경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합의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연수기간은 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반은 정부의 2급 내지 5급의 중간관리직 공무원, 정부관련 단체의 임직원, 고시합격 신입관리자,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공무원과 여성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교직자반은 비사회과목의 중등교사, 교장·교감 등의 교육행정직, 사회교육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반은 각 대학의 학생회 간부, 국민윤리과 또는 북한학과 전공의 학생, 기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사회·직능단체반은 종교인, 노동조합 간부, 경제 및 사회단체 등 직능단체 간부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6> 통일교육원 연수과정

(1997. 11. 8 현재)

과정 및 반		대 상	기 간	참여인원	교육 회수
전문 과정	사회교육반	통일교육전문위원, 사회교육담당자, 민방위소양교육담당자, 향군안보강사	3일	678	8
	학교교육반	대학교수, 중등교사	3~4일	1,671	20
일반 과정	공직자반	관리직공무원, 사범연수생, 수습행정·기술사무원, 교육행정직공무원, 보안경찰직공무원, 공안공무원(교정·교회직), 정훈장교, 정부관련기관임직원, 통일원공무원	3~5일	2,382	33
	사회기관·단체	사회교육기관기관장, 통일관련기관·단체간부, 여성단체간부, 사회단체간부	2~3일	897	14
	대학생반	대학신입생, 학생회·동아리간부 등, 북한·윤리학전공학생, 통일수련회참가대학생	2~3일	5,455	75
	기획·자원교육반	사회각계인사	1~2일	6,272	127
순회 교육	국내	대학생, 도서·오지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공무원	-	32,177	-
	국외	대양주, 독립국가연합, 남미지역 등 거주 교포	-	33,372	-
총 계			1일~6일	52,092	-

자료: 통일교육원, 「'97 통일연수계획」, (서울: 통일원, 1997).

순회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여건상 초청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관이나 단체의 간부 내지 지역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통일연수원의 교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통일연수를 말하며, 초청연수보다는 단기간이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대상자들의 연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청연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써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81년부터 시작된 해외순회 연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외동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순회연수의 목표는 해외교민사회에 대하여 우리의 통일정책의 합리성,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핵문제 등 남북한간의 현안문제와 남북대화의 진전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평화적 통일기반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해외동포들의 민족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자체 소속 통일협회의가 주관하는 “겨레사랑방”이라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에서 주로 탈북자들이 강사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현실에 관한 강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대략 30여명 정도이다. 이외에도 한국자유총연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남북 교류에 대비한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일간에 걸쳐 6과목을 교육하며, 전방 견학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남북한의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일정책 및 북한 대남전략을 주된 내용으로하면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1995년 광복과 분단 5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염원하는 “민족화해학교”를 개설하였다. 민족화해학교는 북한 관련 전문가와 탈북귀순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및 통일문제와 민족문제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화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주로 강의와 토론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론적인 접근방식은 물론 실천적 접근방식도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



## 제Ⅳ장 통일교육 개선방안

### 1. 개념 및 목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동안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멸공교육, 안보교육, 이념교육, 통일·안보교육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1980년대 들어서 종래의 반공교육을 적극적인 통일교육으로 개편하면서 비로소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부의 통일교육 지도자료에 의하면 통일교육이란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분단을 하루 속히 극복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자유와 복지가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실현되는 통일국가를 준비하고 완성시키는 데 요구되는 지식, 태도, 가치관, 사고와 논의 능력 및 행위규범과 절차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하게 하는 교육”<sup>71)</sup>이다. 또한 교육부는 통일교육이 단순히 통일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니라 남북대결이라는 안보적 측면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72)</sup>. 그러므로 교육부에 따르면 “통일교육이란 통일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선택과 비판을 위한 분석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숙달시키며, 통일국가를 성취하려는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통일문제에 관련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을 말한다.”<sup>73)</sup>

71) 교육부, 「통일교육지도자료」, p. 1.

72) 위의 책, p. 5.

이러한 통일교육의 개념 위에서 교육부는 통일교육의 목표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역량을 강화하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는 통일문화를 창조해야 하며, 남북한이 단계적인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될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는 체제융합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교육”에 두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의 목표를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 배양과 더불어 통일문화의 창조, 통일과정에서의 갈등해소 능력 배양 등에 두고 있다.

통일원의 경우 “통일교육이란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sup>74)</sup>고 정의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목적으로는 “첫째, 자주적·민주적·평화적인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이해 기반의 확충과 함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창출을 위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건전한 행위규범을 온 국민들이 갖도록 하며, 둘째, 통일조국의 형성과 장차 통일조국이 경험하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식과 대응 능력을 신장하고, 셋째, 세계 속의 새로운 통일조국 및 한민족의 위상과 세계발전을 위한 한민족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sup>75)</sup>고 설명한다.

73) 위의 책, p. 5.

74) 통일원, 「통일교육 기본방향」(서울: 통일원, 1995), p. 4.

75) 위의 책, p. 5.

그러나 통일교육은 이러한 사전적 개념 정의보다는 분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상황을 살펴보고 기본개념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분단과 통일의 개념은 정치·경제·지리·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한반도는 강대국에 의해 분할된 국제형 요소와 더불어 민족 내부 분쟁에 의한 내재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는 1민족 2국가 2체제로 분할되어 국토 분할, 통치권 분할, 민족간 이질성 증대 등의 분단에 따른 부정적 요인이 심각하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은 통치권의 분리로 인한 1민족 2국가체제가 하나의 통치권이 전일적으로 행사되는 1민족 1국가 체제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민족구성원이 다수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특정 경제체제 아래에서 단일화폐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장애없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뜻한다. 지리적 측면에서 통일은 여러 생활권 지역으로 분할된 국토가 한 생활권 영역으로 단일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통일은 상이한 사회문화체제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동질화되는 국민통합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이란 국토 분할, 통치권 분할 등이 해소되어 평화적 방식에 의하여 통일 민족국가가 건설되는 것은 물론, 민족간 이질성 증대가 사라져 사회문화적 통합까지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일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은 남북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하여 민주적 통일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행위규범, 절차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통일전후 과정에 대한 판단력을 제고, 통일과정에 동참시키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배양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이 경우 통

일교육의 목표는 우선 한반도 통일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시민의식의 배양, 통일 당위성의 인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기반구축 및 통일후 국민통합 등을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외에도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으로서 통일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지식, 합리적 선택을 위한 분석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의 고취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 2. 기본방향

현재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sup>76)</sup> 통일은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사적 당위성을 지니며,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민족 이질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민족 이질화 경향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통일은 점점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통일의 당위성도 점차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일차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역사, 언어 등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요인을 강조함으로써

76)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통일의지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당위성 보다는 현실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최영표,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 포럼(1996.3.26)

민족 자존과 민족적 정체성을 복돋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교육을 통해 한민족의 일원임을 항상 자각하게 하고 분단된 우리 민족을 통일하여 한민족공동체를 이룩하겠다는 통일의지를 함양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남북간 대립의식 및 적대 의식을 해소시켜 가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정치적 공간과 사회·경제적 공간의 일치를 추구하는 통일민족국가의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은 합리적인 통일대비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더불어 통일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국민들에게 분단의 배경과 과정, 남북한 체제의 비교 및 현실,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 등의 분단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해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 남북한 통일 노력과 문제점 등의 통일 준비과정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통일조국의 미래상 및 조건, 통일국가 형성 과정과 과제 등 통일 이후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적 갈등과 혼란 등에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상황 인식과 대응 능력을 신장시켜 국민들이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단순히 안보교육의 연장이 아니고 또한 안보문제를 무시하는 교육도 아니다. 통일교육은 통일과 안보의 두 축 가운데 통일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되 현실적인 안보의 중요성도 고려할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을 갖게 해야 한다. 따라서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한 영역으로 계속 존재하면서 통일관련 교육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정치참여 능력과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개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정치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의 가치 및 제도를 이해·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의 비판력 및 판단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치참여를 통한 사회의 민주화 및 인간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체제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능력을 함양시켜 통일 후 발생가능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민주적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교육은 민주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통의 가치를 발견해나갈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정부가 통일 정책을 홍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교육할 경우 소수견해를 가진 국민들로부터 외면·배척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국민들의 무관심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교육은 정부시책의 홍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통일논의의 과정에서 민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적 측면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통일교육은 국민들에게 특정 이념체제 및 정책을 주입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통일문제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들의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비판

의식의 고취라는 통일교육의 기본적 사명의 실현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식,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이 강조되어야 한다. 더욱이 통일문제는 결코 단선적이거나 단기적 시각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미래지향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일곱째, 독일통일의 후유증을 볼 때 우리의 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점진적 통일 실현을 위한 정책이념과 이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통일이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를 확대·발전시키고 상호개방과 개혁을 통해 이를 수 있다는 정책적 합의를 도출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북한 통일정책의 폐쇄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정부의 통일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편, 한반도 통일은 남과 북의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무력을 배제한 평화통일 원칙하에서 민족사회를 이룩한 후 국가통일을 이룩하는 점진적 방식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이를 위해 남북한 통일정책의 상호비교와 남한내부의 다양한 통일정책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급진적 흡수통일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독일통일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 통일은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고 정치·사회적 통합과정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통일에 의해 불가피하게 초래될 사회적·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고 통일에 따른 가치관 변화가 가져 올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 대상별 개선책

#### 가. 초·중·고등학교

##### (1) 교육 내용

서울대 통일교육 연구위원회가 1996년 4월 전국 초·중·고 교사와 교육관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고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64.6%가 현행 학교 통일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답했고 담당 교과서에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아예 없다는 응답도 전체의 56%를 차지했다.<sup>77)</sup> 통일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그 분량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중심의 제4차까지의 교육과정, 북한을 대화와 대결의 상대로 전제한 통일교육 중심의 제5차 교육과정, 북한을 대화와 포용의 상대로 인식 적극적인 통일을 모색하고 민족공동체 형성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렀다.

그 동안의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목표를 제시해주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목표는 상호 모순되거나 실제 사태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이는 통일관련 교과목이 일관된 교육내용과 방법론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당시의 정치적 목표에 동원된 점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즉 통일교육의 주안점이 정책상의 고려나 정치적 선택에 의해 선정됨으로써 교육의 지침, 목표, 내용, 지도방법, 평가, 지원관리체계 등이 일관성 있게 실시되지

77) 김민하,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의 확립,” 중앙대학교 민족발전 연구원 주최 통일정책 대토론회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1996.11.26).



못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는 임기응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향후 통일교육은 국내정치적 목적을 띤 통일교육이 아니라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평화통일과 통일과정 및 통일 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제6차 교육과정 개편 후 초·중·고교 통일교육의 내용 변화 가운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실상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서 김일성 부자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도층과 북한 주민 간의 차별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북한체제와 북한주민들을 분리시키면서 동질성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통일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소신 있게 다루는 것이 교사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통일관을 자유민주주의적 시각하에서 수용하되 극히 편향된 입장은 배제하는 선에서 교육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통일정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친편일률적인 내용에 커다란 관심을 보일 수 없고 학습효과도 극히 저하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다양한 통일논의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할 경우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교과 전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정책, 북한 현실 등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제5차 교육

과정에서 지도되었던 북한관련 주요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이는 반공교육 차원에서 교육내용을 서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 및 남북한 비교, 통일노력 등의 내용은 통일교육 차원에서 더욱 보강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보강할 경우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북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남북관계, 통일방식, 통일의 미래상 등의 건전한 통일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경우 통일에 관한 노력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후 삶에 대비하는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가올 통일한국의 시민으로 성장할 초등학생에게 '통일사회에의 적응'에 관한 내용도 통일교육의 주제로 보강시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학년별 주제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주제 구성상의 난이도가 높아져야 하지만,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경우 이해하기 쉽지 않은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교육이 4학년에서 실시되는 등 구성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도덕교과의 구성을 바꾸어 통일교육의 체계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국어과 통일교육은 말하기·듣기 및 쓰기 영역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주로 읽기 영역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국어과 통일교육 내용을 개편할 경우 읽기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고르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사회과의 경우 지리, 광업, 통일방식 등을 4·5·6학년에 한하여 가르치고 있으나,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지리, 역사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내용을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혀 통

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남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을 비교·검토하고 통일이전의 문제점 및 통일후 삶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도덕과에서의 통일교육은 이전보다 진일보하여 통일대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 있어서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거나 북한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할 수 있는 위험성도 상존해 있다.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통일교육과 연계한 민주 시민 교육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시민적 자질에 달려 있다. 특히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화합과 단합을 기할 수 있어 통일을 앞당겨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일에도 매우 유익하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 국가의 미래상이 민주국가이며, 그러한 통일국가 달성의 과정 또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분명한 이상, 통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중학교 통일교육은 도덕교과에 집중되어 있으나,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중학교 국어과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등 국어과 통일교육은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개입시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분석적 국어교육 보다는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유용한 남북한 언어 및 문학작품 내용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복 이전의 국어, 문학 등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통해 광복 이전의 민족문학 작품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 통일교육은 중등 국사과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내용이 남북한 현대사의 변천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중등 국사 교과내용 개편시 민족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내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행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서는 지난 5차 교육과정에 비해서 북한공산주의 이념과 실상 등 이념 교육관련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남북한 현실'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으며, 분단관리 및 통일비용, 통일이 가져올 이익 등에 대한 내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북한체제의 현실에 관한 내용이 거의 누락되어 있어 향후 통일 추진과정, 통일 이후의 문제점 및 통일을 대비하는 이해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중학교 교과와 고등학교 교과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현실과 정책관련 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을 다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교육제도 및 방식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주요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분단, 북한, 이념, 통일정책 등은 아직 학문체계로나 교과체계로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각급 학교의 다른 교과목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교육, 교사양성 과정 등이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타 교과에 비하면,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는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 통일교육은 이데올로기 교육방식에 치중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도덕교육적 접근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통일문제는 단지 민족통일이라는 감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실성을 중시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데올로기적·윤리적 접근보다는 지식·이해관계와 같은 인지적 특성과 가치관 및 태도까지 포괄하는 사회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이 체계화·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도덕 및 윤리교과서로부터 독립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의 교육방식으로 주입식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주입식 교육방식은 동기 유발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물론 교육부는 통일교육의 방식으로 비교 모형, 개념 모형, 탐구 모형 등을 학습내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수업내용의 과중, 자료 부족 등 제반 여건의 부족으로 학습 현장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통일단원의 내용이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설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탐구수업모형이나 협동학습모형 등 학습자 중심의 체험적 수업을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 산하에 통일교육연구회를 설치하고 학생 수준에 알맞는 학습자 중심의 체험적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현장에 실제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을 다루는 특정 교과외의 경우 그 내용이 대부분 교과서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고, 수능 시험 도입 이래 통일 관련 문제가 입시 문제에서 배제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교사 역시 시험에 출제

되지 않는 통일관련 부분의 지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통일교육 수업에서 탐구방식이나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교과서만을 지도하는 경우가 약 25%에 달한다는 연구조사가 보여주듯이<sup>78)</sup> 현재 통일교육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 때우기식 수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영·수 우선의 교과과정 및 입시배점의 비중문제를 조정하여 고입 연합고사 및 대학수학능력 시험, 대학별 논술시험 등에 통일 교육과정을 반영시킨다면 교육 효과면에서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시기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때 학기 말에 시간 배정이 이루어져 학습효과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관련 교과목에서의 구조개편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 도덕과에 배정되어 있는 교육시간은 학년당 매주 2시간씩 총 68시간이며, 이 가운데 통일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민족생활 영역에 배정된 시간은 연간 12~16시간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비하여 배정시간은 늘어났으나 실질적인 교육효과나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시기적으로 국가·민족생활 영역의 교육시기가 11월부터 방학을 거쳐 다음해 2월에 걸치는 학년 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중요성에서 인식도가 낮고 교육이 시간적으로 중도에 단절되어 학습효율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는 도덕이 매학기당 평균 2시간씩 배정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윤리과목의 총 이수단위가 6단위로 매학기

78) 이순교, "학교 통일교육 실태 및 교사의 대북한 인식 분석: 도덕·국민윤리 교과과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pp. 204~206.

학급별 주당 1시간 수업을 6학기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가운데 통일관련 단원을 학습하는 시간은 중학교의 경우 총 16시간 내외, 고등학교의 경우 8~10시간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 등 극히 적은 시간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에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경우 주당 2시간 배당되어 있는 도덕수업 1시간을 통일교육에 할애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이수단위를 8시간으로 늘리고, 2학년 윤리과목의 주당 수업시간을 2시간으로 배당하여 그 중 1시간을 통일교육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통일교육관련 내용 구성에 있어서 교과서 맨 뒤부분에 구성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입시준비로 인하여 소홀히 다루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초·중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구성을 바꾸어서 통일교육의 수업 집중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통일에 관한 시사 자료나 각종 시청각 자료들은 풍부하게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통일관련 교수학습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입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중·고등학교 교사의 14.8%만이 '로동신문'을 본적이 있으며, 북한영화는 28.7%, 북한 학술지 9.3%, 북한 소설 15.7%, 북한 잡지는 13.0%만이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업에서도 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교사들은 62%가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으며, 상급기관 배포자료의 이용율은 29.6%에 불과할 뿐이다<sup>79)</sup>. 더욱이 현재 통일단원은

79) 이순교, 「학교 통일교육 실태 및 교사의 대북한 인식 분석: 도덕·국민윤리 교과와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서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35.

도덕 및 윤리과목에 통합되어 취급됨으로써 시의적절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못해 급변하는 통일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교육계, 학계, 행정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교육 자료 개발팀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시사성 있는 자료를 학습자 중심 수업모형에 적합하게 개발하고 통일교육과 관련있는 시사성 있는 자료를 교육행정 전산망을 통해 공급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이외에도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은 전담교사들의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도덕·국민윤리」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중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40%가 대학의 전공학과가 다른 교사이다. 더욱이 전공 교사가 부족하여 「도덕·국민윤리」 교과목을 다른 전공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도 60%에 이른다<sup>80)</sup>. 그러므로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교사연수 문제를 들 수 있다. 교사가 통일교육의 실질적 담당자라면 교사들은 연수를 통하여 급격한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통일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통일교육과 관련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게 습득해야 만이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관련 교사 연수는 연수기회의 부족, 연수기관의 미비, 연수 프로그램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 연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의 확충이 시급히 요청된다. 북한학과에

80) 최완규 외, 「21세기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서울: 1996), p. 7.



대한 대학원 설립 지원은 물론이고 통일정책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 설립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나. 대학교

### (1) 교육 내용

대학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통일교육을 심화시키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강의 제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없는 편이다. 예컨대 북한학과는 북한정치를 주된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북한 사회·문화 관련 교과목은 등한시되고 있고 통일교육이라면 당연히 중요시해야 할 통일정책, 한반도 통일환경, 통일사례 등의 교과목도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편중된 교과과정은 북한학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sup>81)</sup> 이러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정치학자 주도로 북한학과가 개설되었고 학과의 인원구성도 정치학 전공자 위주로 충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학과는 정치학자 이외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등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교과과정 역시 다양하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통일교육의 경우 구조와 체제 중심의 추상적 차원에서 교육

81) 가령, 동국대 북한학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북한학은 한반도 분단 원인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분단된 민족과 국토를 슬기롭게 통일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학문으로서, 북한학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연구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학습케 하여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정착 및 민족의 재통합에 기여하는 북한 전문가를 양성함.”

이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와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의 구체적 현실 및 일상생활은 등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 자체가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기대한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통일 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이러한 관심을 충족시킬 만한 교과목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를 대학에서 시급히 확보하고 육성하는 한편, 이러한 연구인력을 통해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교육 교과목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 (2) 교육방식 및 제도

대학 통일교육은 교육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예컨대 1996년도 대학 입학정원은 266,015 명인데 비해 정치외교학과, 국민윤리교육과, 북한학과, 국제관계학과의 입학정원은 3,315명으로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약 1.25%에 불과하다<sup>82)</sup>. 이처럼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전공분야는 일천하고 교양선택과목은 교수와 학생들간의 완전한 선택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진척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 주무부서인 통일원과 교육문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유기적인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양부처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갈 때 실로 획기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 각 대학 교양과정에서 통일관련 교과목을 선택필수과목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범계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에

82) 최완규 외, 위의 책, p. 24.

북한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 통일에 대비한 기초지식을 함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북한의 각급 학교 교과서에 대해 교사 및 학생들의 자유로운 열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양과목처럼 통일관련 과목도 시간강사의 비율이 높다. 시간강사의 경우 통일에 관한 일관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강의에 임하기 보다는 교육경력을 충족시키는 기회로 통일 관련 교과목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욱이 통일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통일문제에 커다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고 강의에 임하는 학생도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전문성이 미흡한 시간강사가 통일관련 과목을 맡는다는 것은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경험의 측면에서 우수한 통일관련 담당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북한학과는 현재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관동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북한 및 통일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북한학과를 증설해야 한다. 한편, 북한학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특수대학원 차원의 북한학, 통일정책관련 교육은 활발한 편이다. 이들 특수대학원을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통일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관련 특수대학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수 충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특수대학원들은 전임 교수의 채용없이 해당 대학교의 학과교수들을 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효과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 진행상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은 자료 부족을 첫 번째 문제로 들고 있다. 학생이나 교수들의 경우 북한 관련 다양한 자료가 부족

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도 여의치 않다. 특히 북한 원전에 대한 활용이 법적·제도적인 문제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인상깊게 받아들이는 북한 영화감상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통일원의 특수자료실에 반드시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통일원 특수자료실의 수용능력은 최대 70명에 불과하여 많은 인원들의 시청각교육도 근본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sup>83)</sup> 통일교육을 위한 자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강의모델 개발이 있어야 하며, 통일교육 교재와 모델개발에 통일원과 교육부의 연구비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관계법령이나 지침을 전향적으로 정비하여 적어도 대학의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자료·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강좌를 개설, 통일안보상황 및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통일 및 이념교육은 대학생들의 교양과 지적수준을 감안하여 교육내용을 사회과학적으로 연계한 분야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각 대학의 통일교육 개선을 위해 분야별 강좌에 대한 재정지원, 자료·정보의 보급, 전문가 연수, 현장견학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sup>84)</sup>

통일관련 교양과목은 일반적으로 종합대학의 경우 4~5개 정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학기당 총 수강 인원은 약 300여명 정도이다. 이처럼 대학 통일교육이 부진한 이유는 통일관련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83) 최완규 외, 위의 책, p. 63.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학교 통일교육관련 정책과제」, (1997. 5.) 참조.

규정되어 있고, 학생들은 단조롭고 흥미가 덜한 통일관련 교과목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관련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법을 개정하여 통일교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각 대학별로 통일교과목을 선정한 후 이를 학과별, 계열별, 단과대학별 구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최소한 지정선택과목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각종 고시과목과 공무원 임용 및 승진시험에서 통일 관련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한 방안이다.

이외에도 통일관련 교과목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며, 통일관련 교과목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교양과목이나 유관학과의 전공과목에서 북한이나 통일을 다루는 독립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도 바람직한 대학 통일교육의 제도개혁 방향이다.

대학 통일교육도 기본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이론, 정책의 수립과 평가 및 비판 등을 주된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비교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교수 중심의 주입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통일에 대한 기본정보 및 자료를 인지도시킬 경우 교수중심의 강의법과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지식·정보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체제 및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할 경우에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판단력을

제고시키는 토론식 수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통일국가의 미래상이나 통일후 문제점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최대한 합리적인 자료에 바탕하여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다. 사회교육기관

##### (1) 교육내용

사회교육기관은 학교와 매우 대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통일교육의 계획과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회교육기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회교육은 학교처럼 구분이 불분명하고 학년 개념도 없으며, 등록과 탈퇴가 용이하다. 교사 역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교육에 있어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도감독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총무처, 노동부, 내무부 등 설립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 지시와 감독이 학교와는 전혀 다르다. 사회교육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각 사회교육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강제로 통일교육 실시를 요구하기 어렵다.

사회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교육기관의 성격에 따라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다. 예컨대 어떤 기관은 통일교육에서 안보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어떠한 기관은 민족화해와 동질

성 확보에 최우선적 비중을 둔다. 또한 어떠한 사회교육기관은 다양한 통일논의를 강조하기 보다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홍보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더욱이 명목적으로 통일교육의 목표를 화해와 평화 추구에 두지만, 실제로 교육현장의 정서나 교육내용을 분석해 보면 반공교육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남북간의 이질감을 심어주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사회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다른 점은 오히려 통일의 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원이나 사회교육기관을 관장하는 각 부처들은 사회 통일교육이 극히 안보 위주로 편향되거나 또한 북한체제를 옹호하지 않는 한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통일교육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의식 및 판단능력을 고양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2) 교육방식 및 제도

사회교육은 대상자 및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적고, 대부분의 사회교육기관이 통일교육을 일회용으로 단기간에 걸쳐 진행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학교 통일교육과는 달리 사회통일교육은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변하는 통일환경 속에서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및 기업들이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 통일교육의 지원체계에서도 학교 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사회교육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양성과정 또는 연수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 연수과정은 통일교육원을 제외하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기관은 없다. 전문가 연수 및 재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북한학과 및 통일관련 특수대학원을 증설하여 전문가를 육성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통일교육은 기관의 특성 및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수자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학교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수준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통일교육 담당자를 위한 전문연수 기회 및 수준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자료의 제공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사회통일교육을 통한 국민적 합의 및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사회 통일교육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은 피교육자의 반발을 일으켜 교육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통일정책 및 주변통일환경 변화 추이, 북한 내부 변화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통일관련 판단력을 제고시키고,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 토론식 방식을 교육방식으로 채택하며, 현장학습을 통해 추상적 차원의 교육방식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교육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제 V 장 결론

현재 우리의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 대한 통일대비교육으로서의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통일후 남북한간 사회통합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후 남북한간 통합과정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의 정치적·제도적인 통일은 행정적·법적 절차를 통해 이미 완료되었으나, 동·서독지역 주민들간에는 정신적·문화적 이질성이 상존하고 있다. 독일 통일후 구동서독 주민간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북한주민들은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남한주민들과 다른 의식구조를 형성하여 왔고, 국가관, 생활방식, 가치·경험체계 등의 상이성과 아울러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남한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과도통합단계에서 북한주민들은 정치·사회·경제적인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에 빠질 수 있으며,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날 개혁에 대한 저항과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체제의 특징이 의식 형성에 반영됨으로써 의존적이고, 소극적이며 비창의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개성을 말살하고 주체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환경의 영향으로 개성 상실과 사고력 저하의 문제점을 안게 될 것이다. 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의 현격한 소득격차는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열등감을 자아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과도통합단계에서 북한주민들을 새로운 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개혁·전환시키는 정치교육의 필요성

이 대두된다.

남한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남·북한의 통합 이해, 통합의 역사적 의의, 남한지역 주민의 물질적 희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시민 교육으로서 남한의 정치·경제체제를 이해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잔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정치교육의 장기적 목표는 민족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민족 번영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지식, 능력, 태도 및 자질을 함양하는 데 두어야 한다. 정치교육의 단기적 목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정치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며, 사회의 가치 및 제도를 이해·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두어야 한다.

정치교육은 북한주민들의 경험 및 인식체계를 변화시켜 남북한 주민들간의 정신적·심리적 동질성 확보를 정치교육의 최우선 내용으로 해야 한다. 모든 주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린 일당독재의 잔재를 없애고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탈정치화시키며, 사회 구성원들간의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논쟁문화」가 정착되게 하며, 다원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정당구조에 익숙하게 하고, 정치제도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치교육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과 남한지역 주민들이 정복자로서의 우월의식이나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정신적·심리적 분단의 극복과정에 동참하여 북한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주민 의식개혁을 위한 정치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남한지역 주민들도 통일과정

및 통일후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비롯한 제반 문제점에 관하여 정치교육을 받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지역의 정치교육기관의 정비 및 기능의 확대·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과정 및 통일후 정치교육은 통일이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가령, 통일의 부정적 측면인 과도한 통일비용 및 사회불안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신하여 남한지역 주민을 상대로 남북통일은 장기적으로 경제부흥을 가져오며, 통일사회의 건설은 청소년세대를 위한 도전의 장을 마련해 줄 것으로 정치교육은 강조해야 한다. 특히, 북한지역 주민들을 상대로는 통일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수립되고 법치국가와 자유로운 인간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며 경제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북한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은 통일과 관련된 학교교육과 비학교교육인 성인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정치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교육통합과정이 시사하는 것처럼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관련 교과목의 폐지, 학제 변경, 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육행정의 개편, 연구비 및 학자금 보조 등의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남북한간 교육통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치교육 대상자들은 북한지역주민,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와 그리고 교육적 영향력을 가진 자(교사, 교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치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과 전문가교육과정으로 나눈다. 대상별 교육의 형식과 내용에는 각기 특성을 살리되 일반교육은 학생 및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며, 전문가교육은 정치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도통합단계에서의 정치교육과정은 체제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정당과 같은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 교육적 영향력을 가진 교사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점차 일반 주민들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북한지역 정치교육은 이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체제개혁을 주도해 나간다는 의도 하에서 정치교육의 교육자들도 북한지역 주민들이 담당해야 하지만, 북한지역 교육자들이 양산되기전까지 초기 정치교육의 교육자들은 기본적으로 남한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북한지역에 파견하기 위한 교육인력을 사전에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당교수 및 교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남한내 은퇴한 사람을 활용할 수도 있다. 남북한 통합과정상에 있어서 북한지역 주민들의 정체성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 담당자들로 북한출신 교육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동독지역 주민들은 세뇌교육에 혐오를 느끼고 있어서 「누구에 의한 교육」에는 반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방식 가운데 강사를 통한 강연 프로그램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연 프로그램이나 교과서에 의존하는 관념적인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는 실제 생활과 연관된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 위주로 행하도록 한다.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보다는 토론 내지 논쟁형식의 교육방식을 적용할 경우 북한지역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치교육을 위한 기본서 및 대국민 홍보물 보급의 원활화를 기한다. 정치·경제·사회 및 국제관계의 쟁점을 기술하고 있는 각 교육영

역별 교재를 개발하여 각 지역 정치교육 담당기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연구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세미나 및 강연과 같은 직접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전파·영상매체를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민강좌」를 대도시에서는 구단위로, 지방에서는 군단위로 확대·개편하여 통일과 관련된 분야의 강의를 개설하여 무료 청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산하 재단 및 연수원도 중요한 정치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하며, 각 대학의 연구기관과 종교·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남한의 각 종교단체들의 정치교육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및 정치교육과 관련한 각종 행사 등을 북한지역은 물론 남한지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남한지역내의 각종 협회와 단체, 이익단체와 동호인 클럽들의 북한지역 지부 설치 및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보급·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회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접촉의 강화, 남북한 주민간의 「만남의 장」 및 공동문화행사 등을 통한 상호 이해와 동질성의 회복·발전, 남북 화합을 위한 특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정치교육을 위한 기본서 및 대국민 홍보물 보급의 원활화를 기해야 한다.<sup>85)</sup> 정치·경제·사회 및 국제관계의 쟁점을 기술하고 있는 각 교육영역별 교재를 개발하여 각 지역 정치교육 담당기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연구토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5)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자료는 정치교육본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서적, 잡지, 영화, 그림, 사진 등이 최대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자료에 사용하는 용어는 서독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용어 선정은 남북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채택해야 한다.

학교 세미나 및 강연과 같은 직접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전파·영상매체를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통합단계에서 북한 지역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문, TV,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한다. 북한지역 대중매체의 편성 및 편집 과정에서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 등의 북한체제이념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통일과정 및 통일한국의 미래상 등에 관한 내용을 삽입한다. 북한지역 대중매체가 불충분할 경우 정치교육 내용을 담은 남한지역 방송전파 발사, 신문 및 잡지의 배포 등을 통하여 북한지역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작동원리와 이념을 잘 구현한 영화를 제작하여 북한지역 영화관에 상영되는 영화에 삽입하여 관람하게 한다.

우리사회에서 통일교육은 과거에는 정치사상교육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점차 실질적인 통일대비 교육으로 전환되어 왔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현실에 관한 정보 개방, 정부 대북정책의 국내정치 이용 금지 등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구축 기반 위에서만이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으며, 통일 후유증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교육개발연구원. 「독일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 서울: 교육개발연구원, 1993.
- 교육부. 「통일교육지도자료」. 서울: 교육부, 1993.
- 국민윤리학회편. 「정치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1992.
- 김충남.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1992.
-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통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학교 통일교육관련 정책과제」. 1997.5.
- 박용현 외. 「통일교육지침서 개발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89.
- 이순교.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및 교사의 대북한 인식분석: 도덕·국민윤리교과와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최완규 외. 「21세기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6.
- 통일원. 「독일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4.
- \_\_\_\_\_. 「통일교육 기본방향」. 서울: 통일원, 1995.
- \_\_\_\_\_.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5.
- 한국교육개발원. 「독일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 서울: 한국

교육개발원, 1993.

\_\_\_\_\_. 「독일의 교육통합」.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2.

Claußen, B. *Zur Theorie der politischen Erziehung im Elementar und Primärbereich*. Frankfurt: 1976.

Sutor, B. *Neue Grundlegung Politischer Bildung*. Bd 1 und 2. Paderborn: 1984.

Grosser, D. *politische Bildung*. München: 1981.

Oetinger, F. *Partnerschaft. Die Aufgabe der politischen Erziehung*. Stuttgart: 1956.

Giescheke, H. *Didaktik der politischen Bildung*. München: 1965.

Habermas u.a, J. *Student und Politik*. Neuwied: 1981.

Boltheadig, K. *Wage und Zizzle politischer Bildung in Deutschland, Eine Materialsammlung zur Entwicklung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n Schulen 1871-1965*. München: 1965.

Fischer, K. *Einführung in die Politische Bildung*. Stuttgart: 1973.

Rothe, K. *Didaktik der Politischen Bildung*. Hannover: 1981.

KMK. *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 Bonn: 1978.

Schmieder, R. *Politische Bildung im Interesse der Schüler*. Hannover: 1977.

Robinson, S. B. *Bildungsreform als Reform des Curriculum*. Neuwied: 1967.

Adorno u.a, Th. *Der Positivismusstreit in der deutschen Soziologie*. Neuwied: 1969.

Litt, Th. *Die politische Selbsterziehung des deutschen Volkes*. Bonn: 1958.



- Allemann, U. *Partizipation -Demokratisierung- Mitbestimmung*. Opladen: 1975.
- Hilligen, W. *Zur Didaktik des politischen Unterrichts*. Opladen: 1975.
- Mickel, W./D. Zitzlaff, (Hrsg.)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1988.
- Mickel, W. *Politische Bildung an Gymnasien 1945-1965*. Stuttgart: 1967.
- Mickel, W./Zitzlaff, D. (Hrsg.)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1988.

## 2. 논문

- 김민하.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의 확립.” 중앙대학교 민족발전 연구원 주최 통일정책 대토론회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1996.11.26.
- 박용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통일원 주최 세미나 자료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 방향」. 1994.
- 이순교.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및 교사의 대북한 인식분석: 도덕·국민윤리교과와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29집 서울: 동아연구소, 1995.
-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논총」 제6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최영표.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 포럼. 1996.3.26.
- Ballauf, Th. “Zum Problem der politischen Bildung in Schule und Volksschule.” in Päd. Rundschau, (8/1961).

“Zur Ausgangslage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1994).

### 3. 기타

*Der Spiegel.*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부 공시 제1992~15호.

고등교육과정 (1). 교육부 공시 제1992~19.

### 最近 發刊資料 案內

####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외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4,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4,500원
<b>■ 북한인권백서</b>			
북한인권백서 1996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외共著	10,000원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 96 |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 6,000원 |
| 97 |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 5,000원 |

■ 학술회의 총서

- |       |                       |        |
|-------|-----------------------|--------|
| 96-01 |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7,000원 |
| 96-02 |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 9,000원 |
| 96-03 |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000원 |
| 96-04 |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7,500원 |
| 96-05 |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 7,000원 |
| 96-06 |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 8,500원 |
| 97-01 |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 6,500원 |
| 97-02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 7,500원 |
| 97-03 |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 7,000원 |
| 97-04 |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 8,500원 |
| 97-05 |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 4,000원 |
| 97-06 |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 7,500원 |

■ 통일문화시리즈

- |       |                |         |
|-------|----------------|---------|
| 96-01 |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 10,000원 |
| 96-02 |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 9,500원  |
| 97    | 바람직한 통일문화      | 9,500원  |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613, 901-2604, FAX: 901-2547)

